
2019년 경제정책방향

2018. 12. 17

관계부처 합동

순서

I. 現 경제상황 점검 및 평가	1
II. 2019년 경제전망	5
III. 2019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6
IV. 2019년 경제정책 과제	7
1.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7
2.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22
3.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29
4.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41
V. 16대 중점 추진과제	48
【 별첨1 】 2019년 상세 경제전망	53
【 별첨2 】 2019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	74
【 별첨3 】 2019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79

I. 現 經濟상황 진단 및 평가

①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전환기에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우리 경제는 분배가 지속 악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

- ① 가계소득 부진, 사회안전망 부족 등으로 양극화 심화
- ②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혁신 지체 등으로 성장잠재력 지속 저하
- ③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저출산 심화는 인구감소를 가속화하여 성장능력을 제약

장기 경제성장률·분배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전세계적으로도 '0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한다는 인식 확산,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부각

* Inequality & Unsustainable Growth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IMF, '11년)

** OECD 등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등 공급 측면 처방과 소득재분배를 병행하는 포용적 성장론 확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관련 정책 시행 중

○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

- ① 일자리·가계소득 높이고 가계지출은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 ② 규제혁신, 창업 생태계 강화, 신산업 지원 등 혁신의 토대 구축
- ③ 불공정거래 근절, 대·중소 상생 등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

② 「사람중심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변화 시작

① 임금 상승폭 확대('17.1~9월 +3.6% → '18.1~9월 +5.7%) 등으로 근로자가구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되며 소비도 견조한 흐름 지속

- * 가계소득 증감(% , 전년비, '17.3/4 → 4/4 → '18.1/4 → 2/4 → 3/4)
: (전체)2.1 → 3.1 → 3.7 → 4.2 → 4.6 (근로자가구)1.7 → 2.0 → 6.3 → 7.7 → 7.5
- * 소매판매(% , 전년비) : ('17)1.9 ('18.1/4)5.0 (2/4)4.7 (3/4)3.8 (10)5.0

▪ 상용직 일자리가 지속 증가('18.1~11월 +35만명)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도 개선

- *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1~6월 기준, % 전년비) : ('15)△2.7 ('16)1.3 ('17)0.7 ('18)3.1

▪ 임대료 · 입원비 · 등록금 · 통신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 * 주요 생계비 관련 물가 변동('18.1~11월, % , 전년비)
:(월세)△0.3 (입원비)△1.0 (사립대납입금)△0.4 (도로통행료)△1.3 (휴대전화료)△1.5

▪ EITC(최대 77~230→150~300만원) · 기초연금(20→25만원) ·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②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18.1~10월 2.9조원, 전년비 +56%)를 기록하고, 청년 등의 창업도 증가('18.1~10월 8.5만개, 전년비 +5.5%)

- *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 600개 돌파 예상

▪ 그간 취약했던 회수시장 규모도 2배 가까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

- * IPO · 주식매각 등 통한 회수금액(1~9월, 억원) : ('17)12,282 ('18)22,323

▪ 전기 · 수소차 보급이 크게 증가, 재생에너지 투자도 확대

- * (전기차) '18년 3.1만대<~'17년 누적 2.5만대> (수소차) '18년 746대<~'17년 누적 177대>
- * 재생에너지 보급현황(누적, MW) : ('17.3/4) 1,483 → ('18.3/4) 2,284 (1.5배 증가)

③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폭 축소('17.9월 93 → '18.9월 5개)

- *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 : ('16)57.5% → ('17)62.3%
- * 가맹(영업지역 침해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 : ('16)27.5% → ('17)15.5%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확산

- *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수(개, 누적) : ('14)170 ('15)221 ('16)270 ('17)293 ('18.10)337

③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 지속

○ 하반기 들어 고용이 한자릿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어려움 지속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18.1/4) 18.3 (2/4) 10.1 (3/4) 1.7 (10) 6.4 (11) 16.5

▪ 특히,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부진 등으로 1분위 소득이 감소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비, '17년 → '18.1~11월)

: (상용) +37 → +35 (임시·일용)△10→△19 (고용원無 자영업자) +4 →△9

* 1분위 소득증감률(% 전년비) : ('17.3/4)0.0 (4/4)10.2 ('18.1/4)△8.0 (2/4)△7.6 (3/4)△7.0

○ 이는 ①투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저하, ②산업 구조개혁 지연, ③일부 정책의 시장 기대보다 빠른 추진, ④고령화 진전 등에 기인

① 성장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업황 불확실성,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창출력 높은 투자 부진, 기업·시장의 활력 저하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 (민간소비)9.9 (민간투자)10.1 (수출)5.7

② 산업 구조개혁이 지연되며 성장잠재력 지속 하락

▪ 주력업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연되고,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도 현장에서 체감할만한 성과 부족

* 최근 10년간 10대 수출 주력품목 중 반도체 이외 대부분 주력업종의 수출 증가율이 전체 수출 증가율을 하회

③ 최저임금 등 일부정책은 사드 여파, 유가 상승 등과 중첩되며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 부담으로 작용

* '17년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은 25.4%(OECD 국가중 5위)

④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도 분배에 부정적 영향

* '17년 고령인구비율(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인구비율) 14.2% 기록하며 고령사회(고령인구비율 14% 이상)에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4 내년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미래도전요인 본격화

- ①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나, 중국·미국·일본 등 우리경제와 밀접한 주요국은 성장 둔화 전망

* '18→'19년 전망(IMF, '18.10, %) : (세계)3.7→3.7 (중)6.6→6.2 (미)2.9→2.5 (일)1.1→0.9

- 통상마찰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 상존**

- ②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9.5%)는 성장에 긍정적이거나,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도 둔화되며 성장세 제약 가능성

- 미 금리인상 등 대외 요인이 가계부채 등과 맞물릴 경우 **한계 가구·기업 등 부담 증대 우려**

- ③ 고용·분배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

- 투자·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금년보다 **고용상황 개선 예상**되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요인 상존**

* 일자리 사업확대('18→'19년) : (일자리예산) 19.2→22.9조원 (노인일자리) 51→61만개

- 정부 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화·자동화 등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부진, 고령화** 등이 **분배 개선 제약**

* 기초연금 인상('19.4월~, 소득하위 20% 25→30만원), ETC 확대(1.3→4.9조원 9·12월 지급)

- ④ 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도전요인 본격화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인력수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 (싱) 1위 (미) 3위 (독) 13위 (대) 14위 (일) 15위 (한) 19위

-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전환**하는 등 **성장능력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전년비, 만명) : ('17.3/4)△0.2 (4/4)△0.9 ('18.1/4)△4.7 (2/4)△7.5 (3/4)△6.9 (10~11)△6.6

II. 2019년 경제전망

◇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 총동원**

- (성장) '18년과 유사한 수준인 **2.6~2.7% 성장** 전망
 -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활성화·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 보완** 전망
- (고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금년보다 개선된 15만명** 예상
 - 고용률(15~64세)은 '18년(66.7%)보다 소폭 개선된 **66.8%** 예상
- (물가) 유가는 하락하나, 농축수산물·서비스요금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며, '18년과 유사한 수준인 **1.6% 상승**
- (경상수지)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은 **640억불**로 축소
 - 수출입은 물량 증가세 둔화, 단가 상승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 3.1%, 수입 4.2% 증가 예상

2019년 경제전망

	2018년	2019년
▪ 경제성장률(%)	2.6~2.7	2.6~2.7
▪ 취업자증감(만명)	10	15
▪ 고용률(% , 15~64세)	66.7	66.8
▪ 소비자물가(%)	1.6	1.6
▪ 경상수지(억불)	740	640

Ⅲ. 2019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 '19년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비전
·
전략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 공정경제)

사람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정착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투자활력 제고
- 창업 - 성장 - 회수 - 재도전 지원
- 소비·관광 활성화
- 수출 경쟁력 강화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핵심규제 혁신
-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
-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
- 사회안전망 강화
-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 보완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 4차 산업혁명 대비
- 저출산·고령화 대응
-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시장경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엄정한 법집행 +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 대·중소 상생협력)

정책
방향

16대 과제는 상반기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 집중 점검·관리

Big Project

- ▶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착공지원
- ▶ 대형 민자사업 발굴·조기 추진
- ▶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타면제
- ▶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Big Deal

- ▶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 ▶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확산
- ▶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Big Innovation

-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수립
- ▶ 중소·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 보강
- ▶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Big Trust

-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
- ▶ 서민·자영업자 소득 증대·부담 경감
-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 보완

IV. 2019년 경제정책 과제

1.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재정·금융·제도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강력 추진

(1) 투자활력 제고

① 기업투자 활성화

① 행정절차 신속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추진(2단계, 6조원+α)

【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

①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6조원)

- ▶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의 추격에 선제대응
→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②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 ▶ MICE·문화 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립
→ 인구유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

③ **자동차 주행시험로**(0.2조원)

- ▶ '19.9월 EU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맞추어 경쟁력 제고
→ EU 기준 테스트를 위한 3.5km 이상의 직선주행시험로 설치

④ **서울 창동 K-Pop 공연장**(0.5조원)

-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문화·일자리 기반 마련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등을 바탕으로 K-Pop 공연장 설치

- 기업간담회, 투자카라반 등 통해 **분기·반기별**로 지속 발굴·검토

②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 6.4조원 이상의 프로젝트 조속 추진

-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 (現)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
→ (改) 모든 공공시설 허용(민간투자법 개정, '19.上)

- 제도개선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1.5조원+a)

- 비용(B)/편익(C) 분석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업 신속 추진

* (現) 모든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B/C 분석 시행
→ (改) 일정규모(총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은 여타 전문기관(국토연·교통연 등)으로 이양

-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항만개발¹⁾,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²⁾ 신속 추진 지원(4.9조원+a)

1) 항만배후단지 : 평택·당진항 2-1단계(2,473억원, '19.12월 착공), 부산항신항
응동2단계(3,513억원) 및 인천신항 2단계(2,876억원) 사업자 선정('19.上)

항만재개발 :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원, '19.7월 실시협약), 인천내항 상상
플랫폼(396억원, '19.10월 착공), 고현항 3단계(2,200억원, '19.12월 착공) 등

2) 용인 에코랜드 조성(0.25조원),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0.2조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0조원), 위례-신사선 철도(1.5조원), 부산 승학터널(0.5조원) 등

③ 투자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하여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등 지원 강화

-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2조원 규모의 ICT 펀드 신설(우정사업본부(0.4조원), 민간·기관투자자 등(0.8조원)이 펀드에 출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5조원) 조속 가동

④ 위기지역* 內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 3 → 10%, 중견 1~2 → 5%) 등 투자촉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유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 부과)를 비과세 지원(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

* ①완전복귀 기업 :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감면

②부분복귀 기업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 5년간 100%, 2년간 50%

2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투자 확대

①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사업 확정('19.1/4),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 착수

* '19년 예산 중 총액으로 반영된 설계비 등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 검토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중심으로 선정·추진

②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6조원)은 회계연도 개시 前 예산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

- 문화·체육시설(균형발전특별회계)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시 50%까지 국고보조(현재는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 지원)
-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 분석을 토대로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 등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19.3월)

* (예) 전통시장 주차장(개): ('18)31 ('19)45 ('19~'22)198(전체시장 90%)

어촌뉴딜 300사업(개소): ('19)70 ('19~'22)300, 국민체육센터(신규 140개소) 등

< '19년 생활 SOC 예산 규모 >

- '19년 8.6조원('18년 5.8조원 대비 약 50%(+2.8조원) 증가)

① (여가·건강활동)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 1.6조원('18년 1.0조원)

② (지역 일자리·활력)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 3.5조원('18년 2.2조원)

③ (생활안전·환경)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3.5조원('18년 2.6조원)

③ 낙후지역 배려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사회적 가치의 평가항목 반영 등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 마련

* (現)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 (改)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편 및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 강화

-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속 통과 노력

④ 공기업·지자체 등이 추진중 또는 추진예정인 토목·건설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소요기간 최소화 통해 조기 착공 추진

* (예) 세종-안성 고속도로(2.5조원), 양평-이천 고속도로(0.9조원) 등 '19년중 조기 착공

- 공공임대주택의 부지확보, 사업승인 등 일정 단축을 통해 '19년 착공 물량 0.8만호 확대 추진('18년 6.5 → '19년 7.3만호)

- 서울 인근 신규 공공택지의 주거·업무기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선정*시 광역교통망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

* 대규모 택지 4~5개소 조성(1~2개 연내, 나머지 '19.上 발표 예정)

- 입지 선정 이후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⑤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0곳 이상*을 선정·발표('19.1월) 하고, '19년중 사업계획 승인

* (예) 舊부산원예시험장, 대전교도소, 원주권 군부지

⑥ 예정 공사가격 작성, 낙찰자 선정, 계약이행 등 공공계약의 쏠단계에서 적정 계약대가가 책정·지급되도록 개선

* ①(예정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 ②(낙찰자 선정)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 위한 가격평가기준 개선 / ③(계약이행) 간접비 등 추가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

[2]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① 창업 지원(Start-up)

① 혁신창업펀드(2조원)의 창업초기(업력 1~3년) 분야 비중을 확대
(‘19년 50→100%)하는 등 혁신모험펀드(10조원)의 운영 개선

▪ 성장지원펀드(8조원)의 원활한 결성 유도를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19년 30%)을 탄력적용*하고 출자 공모 조기 시행(3→1월)

* 신생운용사 운용펀드는 민간자금 확보역량을 감안, 공공출자를 40% 이상으로 설정

▪ 모태펀드 등을 통한 엔젤투자 지원 펀드 조성(0.1조원)

②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증여세를 5억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했던 창업자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과세)

▪ 적용대상 업종을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예: 여관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네거티브 방식)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
(현재는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사용 조건)

③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 2년간 50%) 요건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

*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 감면 요건을 완화(투자금액 기준 인하)하되 고용요건을 신설¹⁾하고, 감면 한도가 근로자수에 비례²⁾하도록 개편(‘21년말까지 적용)

1) (現) 제조업(100억 ↑), 복합물류터미널(50억 ↑), 연구개발(20억 ↑) 투자시

2) (現) 투자누계액 50% + Min(①상시근로자수×1,000만원, ②투자누계액×20%)
→ (改)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18.12월 개정완료)

- ④ 일반 R&D 보다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 추가

* R&D 세액공제율(일반 R&D/신성장 R&D)

: (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

- ⑤ 국내 벤처펀드의 해외창업기업 투자를 확대 허용¹⁾하고, 외국 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상대국 진출기업에 대한 **상호보증**²⁾ 지원

1) 현재 창업투자조합은 펀드의 40% 이내에서만 해외투자 가능

2) 국내보증기관은 외국인이 창업한 국내기업 보증, 해외보증기관은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기업 보증

② 성장 지원(Scale-up)

- ① 소액공모·크라우드펀딩 확대¹⁾,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²⁾ 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등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1) (소액공모) 10억→최대 100억원 (크라우드펀딩) 창업 7년 이내 → 모든 중소기업

2)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비상장기업, 코넥스 기업에 총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거래소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

- ② 일괄담보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 매출채권, 동산 등 담보별로 실행

- ③ 금융권 수요에 맞춘 지식재산(IP) 가치평가체계¹⁾를 구축하고, **담보IP 회수지원시스템**²⁾을 도입하여 IP 담보대출 활성화

1) 권리성, 기술성 등 핵심 평가요소 중심의 약식형 평가모델을 도입하여 평가기간·비용 경감

2) 채무불이행 발생시 담보IP 매입 및 수익화를 위한 회수지원기구 도입 추진

- ④ 스타트업이 투자자, 기업 등과 협력·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 조성

▪ '19년중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1개 지역**에 **시범조성**

- ⑤ 우수기술 보유시 기술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확대**

-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기술기업, 우수IP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19년 1,250억원, '20~'22년간 3,750억원 총 5,000억원 규모로 펀드 조성 (성장금융, 모태펀드 등 출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70→90% 확대¹⁾) 및 농수산물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²⁾

1) (現) 평가수수료 1,000만원 중 자부담 300만원 → (改) 자부담 100만원으로 감소

2) (現) 개인 15억/법인 20억 → (改) 개인 30억/법인 30억

3 회수 지원(Exit Strategy)

- 1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¹⁾ M&A시 법인세 감면을 '21년말까지 연장 지원²⁾

1)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2)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일몰기한을 '18년말 → '21년말로 연장)

- 2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세제지원(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 완화('21년말까지 적용)

* 재투자금액 의무비율 완화 : 양도대금의 80% → 50%

재투자기한 연장 :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 → 1년

4 재도전 지원(Re-bound)

- 1 중소기업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중진공) 용자 거치기간을 연장(시설자금 4→5년, 운전자금 2→3년)

* (現) 중소기업의 신속한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당 70억원 이내에서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에서 정책자금 지원

- 2 연체 등이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하여 재기 가능성 제고

* 중진공 용자 500억원, 소진공 용자 100억원, 기보 보증 300억원

(3) 소비·관광 활성화

① 소비심리 제고

①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6개월 연장('19.6월말까지)

②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18년 11.6→'19년 15만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원 한도, 1년 한시)

* 조기 폐차 지원('05년말 前 등록차량): 3.5t 미만 최대 165만원, 3.5t 이상 770만원 한도

* 개소세 감면('08년말 前 등록차량) : '19.1.1일부터 1년간 시행

③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

*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

* 공제율(국세+지방세):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1천만원 이하) 16.5%, (1천만원 초과) 33%

④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 상향(현행 30→40%) 등 통해 발행규모 지속 확대('19년 2조원 이상)

* 발행규모 확대(조원) : ('17) 1.1 → ('18) 1.5 → ('19) 2.0

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국회 계류중)를 마련하고,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18년 3천억원)

▪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영수증

② 국내관광 활성화

①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 K-Pop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로 추진

* 기존의 드림콘서트,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 활용 검토

- 코리아세일페스타, 항공-관광 연계상품, 비자제도 개선 등 연계 지원 및 K-Pop 전용 공연장(창동) 건설 추진

- 페스티벌 기간 중 세계 각지에서 K-pop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본선을 개최하여 한류 확산 및 한국 이미지 홍보

* (예) K-Pop 월드 페스티벌 : 전 세계 75개국 90개 지역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 팀의 K-Pop 경연 및 국내 스타들의 축하 공연으로 구성

- 대규모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너지 효과 제고

② 산악·해양자원, DMZ 주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 인천(옹진, 강화), 경기(김포,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대상

- 개발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 휴양관광특구” 도입 등을 추진하여 산악관광 활성화

* (투자효과) 강원 대관령(1,700억원), 강원 매봉산(2,400억원), 경남 하동알프스(1,500억원) 등

- 종합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위한 “K-Ocean Route” 조성 추진

- 동·서·남해안별 해양레저, 도서관광 등 7개 특성화 권역* 육성, 권역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세부 추진방안 마련(19.上)

* (예)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

- 자녀 역사교육과 연계한 고궁 등 주요 문화재 체험프로그램 확대

* 경복궁·창경궁 야간개방 확대, 경복궁 수라간 시식 프로그램 등

-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터미널 등 인프라 확충 및 국적 크루즈선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크루즈선내 다양한 오락콘텐츠 제공 및 국적크루즈선사 경쟁력 제고 등

③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여 한국 방문 활성화

* '18.10월 기준 시내면세점 26개(서울 12개)

▪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 도입

* 現 단체비자 허용 국가 :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중국·일본 등 주요 한국 방문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스타 등을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관광홍보 영상 제작·방영

④ 국내여행에 적합한 봄·가을철을 중심으로 공휴일 및 부모휴가와 연계한 초·중·고교 재량휴업을 유도하고 여행주간 추진

* 연가사용 유도(행안부·기재부·업계 등), 관광콘텐츠 마련(지역), 홍보·정보제공(관광공사, 지역 등)

(4) 수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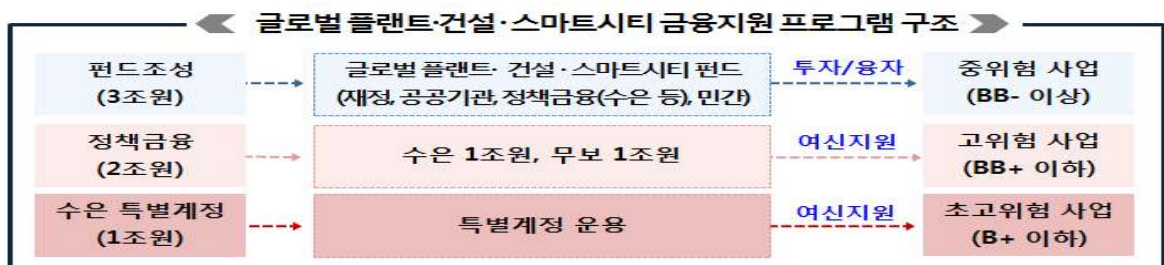
①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①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 사업 위험도(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에 따라 펀드, 정책자금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신설(중위험, 3조원),
- ② 정책금융(고위험, 2조원), ③ 수은 특별계정(초고위험, 1조원) 활용

▪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사업 위험도에 상응하게 면책 부여
(예: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투자손실에 대해 완전 면책)



②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무보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
(’18년 205 → ’19년 217조원)

- 수출기업 뿐 아니라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까지 지원 확대

③ 수출 다변화 위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시 기업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지원(1조원 지원, 필요시 5조원까지 확대)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등을 활용(소요자금 80% 한도, 대출·출자 등)

④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시 현지 투자자·기업·대학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해외거점 센터 신설

* 미시애틀·인도 시범 설치·운영(’19년) → 초기 운영성과 평가 후 지역 확대 검토

② 신북방·신남방 등 대외협력 강화

①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 도출

- (신북방) 對러시아 9-Bridge 사업¹⁾ 추진, 중앙아시아 산업·인프라 협력사업 발굴²⁾ 및 기업애로³⁾ 해소

1) 가스·철도·전력분야 공동연구, 극동항만 공동개발, 조선소 현대화 등

2) 민간협력사업 발굴·지원을 위한 유라시아 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22년까지 1억불)

3) 우즈벡 수르길 가스대금 미납 해결, 천연가스액화설비(GTL) 사업 지원 등

- (신남방)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RCEP 협상 가속화,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22년까지 1억불) 등

*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 + 한·중·일 + 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국 무역자유화협정

② 대외개방 기조를 유지·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

- 교역 다변화를 위해 RCEP, 한-메르코수르, PA¹⁾, CPTPP²⁾ 등 다자간 협정에 적극 대응

1) (PA) **P**acific **A**lliance

2)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개시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와 **양자 FTA** 논의 착수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유지를 위한 **한-영 FTA** 추진

(5)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①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① (재정)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상반기 61%) 실시

- * 특히, 일자리('18년 63.5→'19년 65.0%)·SOC(58.8→59.8%) 사업 조기집행 강화
- 일자리 예산 중심으로 **상반기에 70%**(최근 5년내 최고) **조기 배정,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도 대폭 확대**('18년 4.1조원→'19년 8조원)
-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18.12월) 각종 인허가·사업공모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1월부터 집행 개시**
- 재정관리점검회의 등 통해 **월별로 철저히 집행실적 점검·관리**
- '18년도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분 전액**을 결산 즉시 지자체·지방교육청에 지급('19.4월)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 9.5조원 확대**('18년 44.6조원 → '19년 54.1조원)

② (외환)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

- * (1단계) '18.하반기 내역('19.3월말 공개) → '19.상반기 내역(9월말 공개)
(2단계) '19.3분기 내역(12월말 공개) → 이후 분기별 내역 공개

- 美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美 재무부 등과 **협의·소통** 노력 지속

②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리스크 관리

- 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시 대응

* (주식시장) 증시안정펀드 등 (채권시장)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중소기업 보증 등

- 신용평가사와의 협의,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하고,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정례화

- ②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를 통해 **미·중 통상갈등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 업종별 영향**을 지속 점검

- ③ 우리 자동차가 미측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아웃리치(Outreach) 강화** 등을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 미국경제 및 소비자 기여, 한미 FTA 개정을 통한 호혜여건 기 조성 등을 설명

- ④ G20·APEC·OECD 등 **다자간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보호무역 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에 기여

③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 부담 완화

【 가계 부문 】

- 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¹⁾** 도입, **제2금융권 DSR 관리 기준 설정²⁾**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1)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 자본 적립의무 부과

2) 高DSR(원리금상환액/소득)인 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 (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하는 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로 관리)

- 가계대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부당 금리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제공,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개선 등

②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상환액이 일정¹⁾**
하거나 **금리 상승폭이 제한²⁾**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제공

1)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금리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금은 일정주기로 재정산

2) 시중금리 상승에도 대출금리 상승은 최대 상한폭 이내로 한정

-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유한 책임** 주택담보대출을 민간은행으로 확산 유도

③ **서민에 대한 햇살론 등 금융지원**을 7조원 공급('19년)하고,
중·저신용자 위한 **중금리 대출 지원 확대**('18년 3.4 → '19년 7.9조원)

- **사잇돌 대출**의 지원기준(소득·재직 요건)을 **완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19.1/4)

* 근로소득자 : (연소득) 2,000만 → 1,500만원 이상, (재직) 6개월 → 3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 (연소득) 1,200만 → 1,000만원 이상, (재직) 1년 → 6개월 이상

【 기업 부문 】

① **P-CBO(회사채 담보부증권) 공급규모를 0.6조원 확대**('18년 2.1조 → '19년 2.7조원)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②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은행 여신의 **가계·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해소**하여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

*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가계여신 편중리스크 평가 신설, 가계·기업대출 예대율 가중치 차등화(가계 100→115%, 기업 100→85%) 추진

③ 신속한 회생절차 이행을 위해 **캠코** 등 구조조정기관과 회생 법원간 회생절차기업 정보 공유 강화

4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금융규제, 자산과세 강화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필요시 신속 보완
- 수도권 주택공급 26.5만호* 관련 연내 10만호 이상, 내년 6월까지 잔여물량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

* 총 30만호 공급계획중 1차로 3.5만호에 대한 입지 선정·발표 완료(9.21일)

② 현장점검, 온라인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열 재현 우려시 신속히 추가대책을 강구

-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관련 제재근거를 마련(공인중개사법 개정)하고, 담합신고센터도 운영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제 검토

2.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되었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 창출

(1) 핵심규제 혁신

①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 추진

* (現) 농어촌 : 내·외국인, 도시 : 외국인 → (改) 농어촌/도시 모두 내·외국인 허용

②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 추진

*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 및 수가체계 마련

③ 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 발간(19.1/4)

* (現) 의료법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애로

④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없는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 도입

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 추진

*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문화·행사 등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활용

⑥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여 투자기반 조성

* 경기 1억 1천만㎡, 강원 2억 1천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

- ⑦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애로를 적극 발굴(각 부처 옴부즈만간 협업 등)하여 신속 해결

* (예) 핀테크·ICT 분야, 비수도권에 지역혁신성장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등

[2]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 ①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18.12월)·추진하고, **4개 분야**(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

- **(자동차) 부품업체 자금경색 해소**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 제공

* ①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장기 운영·시설자금 지원, ②신·기보 우대보증, ③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증 등

-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대폭 확대

* 전기차(만대) : ('18) 3.1 → ('19) 4.2 / 수소차(대) : ('18) 746 → ('19) 4,000

-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 xEV산업육성사업('20~'25년 9,710억원, 예타중),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21~'27년 9,500억원, 예타추진)

- **(조선) '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1조원 규모)하여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 지원

* 공공발주시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20년이후)

- **수소연료 선박**('19~'23년 420억원), **자율운항선박**('20~'25년 5천억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에 대한 **R&D 지원 강화**

-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7조원**의 금융지원 제공('19년)

* ①정책금융기관의 산업위기지역내 기자재업체 대출·보증 1조원을 '19년말까지 만기 연장

②기자재업체 제작금융 보증 0.3조원(신보, 기보, 무보), 중형조선사 RG 0.1조원 등

- (디스플레이)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19~'25년 5,281억원) 지원
- (석유화학)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19~'23년, 약 90만평) 및 공업용수 공급 안정화*

* 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19~'21년 2,306억원)

②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부실 발생 前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 기업활력법 일몰을 연장('19.8→'24.8월)하고 지원대상 확대* 추진

* 현재 과잉공급업종에 한정하여 적용중

-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처리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통한 구조조정 병행 추진

- 구성되어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성(예: 0.5조원 확대)

(3)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강화

①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 재정·세제·제도 등 집중 지원

- (스마트공장·산단)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19년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22년까지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

- 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 집중 지원을 통해 '19년 4천개, '22년까지 3만개(제조공장의 1/2) 보급 추진

· (재정) 개별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단가 인상(0.5 → 1억원) 및 핵심요소·모듈이 연계된 패키지 솔루션 등 기술개발 추진

· (금융) 산은(1조원)·기은(0.5조원) 대출공급, 보증비율 확대(90→95%, 이하 신·기보) 및 보증료 추가 감면(0.2→0.4%p)

- (미래차)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 수립('19.1/4)
 -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 (C-ITS) 실증사업 **2개 지역 추가 선정**('19.1/4)
 - *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현재 서울, 제주 2개 도시에서 추진중)
- (핀테크)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 * 해외결제 편의 제고 및 결제수수료 절감(신용카드 해외결제시 납부하던 VISA, 마스터 등 수수료 납부 불필요)
 - P2P 대출의 시장 신뢰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P2P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추진
- (바이오헬스)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 (1상) 소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 검사, (2상)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 (3상) 다수 환자 대상 약효,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
 - AI를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최적화* 등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 R&D 추진
 - *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거 기반의 최적 시험 설계, 대상자 맞춤형 선별 등
- ② AI·IoT·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 확산
 - * (예)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및 IoT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 IoT 가전기반 스마트홈 기술 개발 사업,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창출 지원 등
- **융복합 新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통해 초기 수요 창출
 - * 우수 조달물품: (現) 특허 획득제품 → (改)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융합신제품 추가

- 데이터 기반의 新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¹에 공공기관-기업 공동으로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² 추진

1]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첨단소재 등 4개 분야

2] (예) 각 병원에서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플랫폼을 통해 공유
→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임상기반 신약개발 등 비즈니스 가능

[4]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

- ①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19.1/4)

* (예) 5년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R&D, 창업·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및 규제개선 건의 등을 발굴, 정책개발 뒷받침

- ②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우선 수립(19.上)

* 민관합동 TF 및 업종별 작업반(부처·연구기관 등) 구성, 과제발굴·정책수립 추진
→ 관광, 보건, 콘텐츠, 게임, SW·Data, 스마트물류, 교육 등

- (관광) DMZ·한류·공연·해양레저 등 관광콘텐츠 확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등 마련

- (보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확충, 의료·정보 융복합 인재양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조성, 헬스케어 특화 창업 지원

* 의사·과학자, 인공지능 활용한 글로벌 혁신인재 등을 양성하기 위한 해외공동연구 지원

- (콘텐츠)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 홍보·현지화 등 해외진출 지원, 공정한 제작·유통 생태계 조성 등 추진

* 창업 초기·중기 기업, 재도전 기업 등

- (스마트물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¹⁾, 해상물류 자동화·지능화 등 물류시스템 스마트화 추진²⁾

1) 첨단기술 도입 물류창고에 대해 국가 인증 및 공공기관 자금 우선 지원 등 혜택 제공
 2) 항만 IoT 장치 및 정보 통신 인프라, 항만물류자원 공유 정보 플랫폼 등 개발

③ 유망 신직업¹⁾ 관련 법령 제·개정, 자격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확보 추진²⁾

1) 예) 치유농업사, 냉매회수사 등 삶의 질·환경 관리 등을 위한 신직업 육성
 2) 직역별 인력수급 분석을 거쳐, 업종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

(5)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①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우선 추진

* (도입원칙) ①기관별 특성 반영, ②노사합의 자율도입, ③단계·점진적 추진

-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정보 확대,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 확충¹⁾ 및 컨설팅 강화²⁾

1) 직급 제공범위 확대(100인→ 30인이상) 등 임금시스템(wage.go.kr) 개선, 임금정보와 직무평가간 연계 등 직무급 도입 매뉴얼 마련('19.上) 등
 2) 직무중심 임금·평가체계 개선 컨설팅(400개) 및 교육 등 사후관리 실시

- 사회적대화를 통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마련(경사노위 內 관련 위원회 설치·지원, '19년)

②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 지원체계 구축 위한 관계기관 T/F(기재부·고용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구성('18.12월)

- 노사합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일자리 모델 마련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

- 지역별 다양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논의를 촉진·발굴
 - * (예) 지역 노사민정이 합의·신청 → 심사위원회(중앙정부) 모델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 지역 특성·수요에 맞춘 다양한 모델 지원
- 발굴된 일자리 모델에 대해서는 근로자 정주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소득 증대 지원
 - * (예)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교통비 지원 등
- 일자리 창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우대 방안 마련

③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 마련¹⁾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²⁾ 도입('19년)

- 1) (예) 재원다변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 민간 복리시설 이용지원 등
- 2)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 통합운용 및 운용수수료 등 지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 추가 등 세제지원 확대
 - * (現)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 → (改) '현행' + 출연금 10% 세액공제

3.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었던 일부 정책 보완

(1)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① 경영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①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 본격 개시

- 결제수수료 : 매출액 기준 (0~8억) 0% (8~12억) 0.3% (12억~) 0.5%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②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수수료(%) : (연매출 5~10억) 2.05 → 1.4 (연매출 10~30억) 2.21 → 1.6

-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확대 지원(연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공제율(1.3~2.6%)'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③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허용,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강화

-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18.10월 기 시행)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19.4월)

④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19.下)하여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보호

*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또는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권고된 업종

② 재기지원 강화

①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

* 현재 자영업자에 대하여 신복위의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캠프 공공기관부실채권 매입, 법원 회생·파산 등으로 채무조정 지원 중

②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 마련

(2)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 강화

① (청년)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¹⁾·장학사업²⁾·기회균형선발³⁾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19.上)

1)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18→'19년, 천원): (초)116→203 (중·고)162→290

2) 복권기금 장학사업(중등~대학, 월 30~40만원, 1,500명) 및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초등~고등, 월 35~45만원, 1,500명) 신설

3)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19년 신입생 적용)
: (의학·치의학·한의학) 정원외 5% 이내 신설, (법학)정원내 5→7% 이상 확대

▪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등 지원규모 **2배 수준 확대**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18, 추경 포함 → '19): (예산)3,417→6,745억원 (인원)9→18.8만명

2) 청년내일채움공제(만명): ('18)15.5→('19)25.5,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만명): ('18)4→('19)8

▪ 생명·안전, 현장·기술분야 등 중심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추진

* 기관별 적합업무 발굴 및 채용계획 마련·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격려** 및 **인센티브** 지속 실시

* 대통령 주재 '일자리 으뜸기업' 격려 행사 개최

* 정기 근로감독(3년)·세무조사(1년) 면제, 출입국 express line 이용, 신용평가금리 우대 등

▪ **안전·여가** 등 **2단계 사회서비스 일자리**(17만개) **발굴·지원**

* 예) 아동안전지킴이, 성폭력 피해 지원, 장애인생활지도사, 산림휴양서비스 매니저 등

② (여성)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8만개¹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 확대²

1] 아이돌봄(2.3→3만명), 노인돌봄(3.6→3.8만명), 장애인활동지원(6.2→7.0만명) 등
 2] 중소·중견기업 : 월 60 → 70만원, 대규모기업 : 월 30 → 60만원

▪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세제지원* 확대

* (現)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

-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현재는 임신·출산·육아에 한정)하고, 동일기업 재취업 요건 완화

③ (신중년)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 신설 ('19년 2,500명)

* (예) 마케팅·회계 등 신중년 경력자를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경영개선에 활용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18년 3천명 → '19년 5천명)하고,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적합직무 추가 선정

* 만 50세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고용장려금(중견 월 40만원, 중소 월 80만원) 1년간 지원

④ (어르신)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등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지원('18년 51 → '19년 61만개)

계층별 일자리 지원

- ① (청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18) 9만명 → ('19)18.8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18) 15.5만명 → ('19) 25.5만명
 ▶ 청년 사회적기업가 지원 확대 : ('18) 675팀 → ('19) 800팀
- ② (여성) ▶ 여성친화적 일자리 : ('18) 12만명 → ('19) 13.9만명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세제지원 확대(동일기업 재취업요건 완화, 경력단절 인정 사유를 현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 추가)
- ③ (신중년) ▶ 경력형 일자리 지원 신설 : ('19) 2,500명
 ▶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18) 3,000명 → ('19) 5,000명
- ④ (어르신) ▶ 노인일자리 확대 : ('18) 51만명 → ('19) 61만명

⇒ '18년말까지 일자리사업 지침·고시 개정 등 집행준비를 완료하고 1월부터 즉시 집행

②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① 최저임금 인상(10.9%)의 영향 완충 위한 연착륙 방안 강구

- '19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 마련·발표('18.12월)

- EITC 확대¹⁾ 및 일자리 안정자금²⁾ 지원 강화로 인건비 부담 경감

1)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57만 → 115만 가구)

2)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238만명(2.82조원)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 인상(월 13→15만원)

-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 확대

*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 인상(월 190→210만원) 등

②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1월 중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 통해 2월중 법 개정 완료

* 세부방안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 계류法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체화하되,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 확정

- '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③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 완료('19.2월 국회 처리)

*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임금보전 균형 도모

-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 (예) 현행 '18.12월말까지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시까지

③ 사회적경제 활성화

① 청년 사회적기업가¹, 청년 협동조합²,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³ 등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 추진

1] '18년 675→'19년 800팀, 2] '18년 30→'19년 60팀

3]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인건비 등 지원('18년 4천 → '19년 9천명)

②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 완화(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등록제로 완화)

- 사업요건이 상법상 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격·업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진입요건 완화 추진(창업지원법 개정)

* (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는 일정규모의 상법상 회사,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며,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제외

③ 마을관리*, 신제품재배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확산

* 도시재생 지역 중심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임대주택, 기초생활 인프라 등을 관리('22년까지 100개소 설립)

-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신용보증 여력 확보('22년까지 신보 5,000억원, 기보 5,000억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지원('19.1월 설립, 민간 재원과 정부 출연금을 통해 '23년까지 3천억원 규모로 기금 조성)

- **사회주택·공동체 돌봄·부모 협동형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19.上)

④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¹ 및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² 추진

1]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확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2]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판로지원 등

[3]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투자 확대

① (주거) 공적임대주택 지원 확대('18년 17.2 → '19년 17.6만호)

- 1주택 한계차주의 주거안정 위해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500호('18년 400호)로 확대하고, 수요를 보아가며 확대 검토(예: 1,000호)

* 연체전 한계차주가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채무상환 및 5년간 임대료 거주(5년후 재매입 가능)

- 주택 면적에 따라 지원중인 월세세액공제에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하여 가격대가 낮은 비수도권 주택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現)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임차 거주시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 (改)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일정수준 기준시가 이하

② (교통) 3조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교통(GTX) A노선(파주-삼성) 건설 가속화

- 교통비 30%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

* 월 44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할인(10%) 판매하고, 정기권 사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 지급(최대 20%)

- 수도권·광역시 등 5~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노선체계 개편, 버스 준공영제 확산 등 노선버스 공공성 확대

* 광역버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19.上 설립), 시내버스는 시도 중심 개편

③ (의료·통신) MRI·초음파,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급여화) 확대

* MRI: ('18년) 뇌·뇌혈관 적용 → ('19년) 복부, 흉부, 두경부 적용 확대

* 초음파: ('18년) 상복부 적용 → ('19년) 비뇨기, 하복부, 생식기 적용 확대

- 근로자(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 등(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알뜰폰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게 통신비를 절감하고, 버스·도서벽지 등에 공공 Wi-Fi 설치 확대*

* 전국 시내버스 2만대, 농어촌 도서벽지 1만개소 신규 구축 등('19년)

④ (교육·문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18년 중위소득 120% → '19년 130% 까지)

- 사립대학교(281개교) 입학금을 '22년까지 80%(전문대 67%) 축소

* 국공립대 입학금은 '18년에 기 폐지

- 행정복지센터 또는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자영업자의 복지·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18년 7만원 → '19년 8만원)

⑤ (환경·안전)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위해 지자체 도로청소차 구입 지원('19년 180대)

* 전국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규모('18→'19) : 150억원(150대) → 300억원(300대)

- 주요 항만 인근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항만대기질 특별법」 제정 추진('19년)

- 침수·붕괴 등 풍수해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종합 정비계획 수립('19.上)

* (예)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 투자방식 → 통합·집중투자 방식으로 개선 등 ('19년 상반기중 전북 임실 경북 영덕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전남 나주 등 5개 지역 시범실시)

(4) 사회안전망 강화

① EITC 확대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①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게 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

▪ **지원대상 : 연령¹ · 재산² · 소득³요건 완화**

1) (現) 30세 미만 단독가구 제외 → (改) 연령 기준 폐지

2) (現) 가구당 1.4억원 미만 → (改) 가구당 2억원 미만

3) (現) 단독가구 1,300 / 홑벌이 2,100 / 맞벌이 2,500만원 미만

→ (改) 단독가구 2,000 / 홑벌이 3,000 / 맞벌이 3,600만원 미만

▪ **최대지원액 : 단독가구 85 → 150만원, 홑벌이 200 → 260만원, 맞벌이 250 → 300만원**

▪ 근로소득자는 '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추정 장려금을 '19.12월에 지원

* (現) 전년 소득분에 대해 차년도 9월에 일괄하여 지급

▪ **실효성 제고** 위해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총당 (30% 한도)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②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 구축

▪ 공청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중 제도설계 · 근거법령 제정 추진

③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3.8만 가구에 생계급여·의료급여 추가 지원 전망

② 사회보장제도 지원 강화

① 아동수당을 '19.1월~8월까지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원(現 소득하위 90% 이하, 만 6세 미만 지원)

- '19.9월부터는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만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 (現) 약 220만명 지원 → ('19.1~) 234만명 → ('19.9~) 247만명 지원 예상

②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19년부터, 소득 하위 20~40%는 '20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약 150만명 어르신은 '19년부터, 추가로 약 170만명은 '20년부터 30만원 지원

- '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원

③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에서 44% 이하로 확대*

* '18.10월말 기준 약 88만가구 지원 → '19년에는 2.6만가구 추가 지원

③ 사회보험 지원 확대

①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19.7월 시행)

* 임금노동자:(지급액)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90~240일 → 120~270일

* 자영업자:(지급액) 기준보수의 50→60% (지급기간) 90~180일 → 120~210일

②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편 추진

* 경사노위 內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위" 운영('18.10월 ~ '19.4월)

(5) 공정경제 질서 확립

1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 엄정한 법 집행 】

- ① 중소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거래관행 개선 모니터링
 - 시스템 통합(SI)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 분석 및 종합 개선대책 마련
- ②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 편의점·외식업 분야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강제 행위, 광고·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점검
- ③ 온라인 플랫폼 분야(모바일 OS, 앱마켓 등)에서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제약 분야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 조사·시정

【 경제민주화 법제도 정비 】

- ①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민사·형사·행정 집행수단 확충
 -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경성담합* 분야에 전속고발권을 폐지
 - *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결정 없이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
- ② **고질적 甲乙관계** 해소를 통해 거래주체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
 -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 위해 가맹점주 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의 악의적 보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상력 보장*

*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여 협상 과정에서 활용

-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범위 확대(3배 이내→10배 이내) 등을 통해 **중소 기술탈취 근절** 추진
- 해외 진출기업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대응 지원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 해외 현지에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재산 출원 등을 밀착 지원

③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 하고, **국내·외 IT 기업간 역차별 완화**를 위해 제도 정비

* 국내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과세기준 합의가 선행될 필요

-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부담 완화**

②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① **다중대표소송¹⁾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²⁾ 등 경영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주주권 행사 활성화

1)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회사 이사 상대로 모회사 주주의 소송 제기 허용
2) (現) 선임된 이사중 감사위원 선임 → (改)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 선출

- 기관투자자의 투명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에 대해 **평가 가점 부여**
-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를 위한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안착 준비**

* 모범기준에 따른 시범운영 기간중('18.7~) 금융그룹의 그룹리스크관리체계 구축, 그룹단위 자본적정성 평가 등을 지원

② **공익법인·지주회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해 **의결권 제한¹⁾, 자·손자회사 보유요건 강화²⁾** 등

1)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

2)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요건 : (상장) 20→30% (비상장) 40→50%

③ 기업 내부감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¹⁾ 기반 조성²⁾

- 1)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 이관(경영진→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 2) 감사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예: 공시되는 사업보고서, 기업 지배구조 평가항목 등에 감사위원의 전문성 관련 사항 포함 등)

▪ 상장·대형 비상장사¹⁾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²⁾ 시행 ('20년~)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 1)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 2)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 선임

▪ 공익법인¹⁾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²⁾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방안 마련

- 1) 총자산 100억원 이상인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종교·교육법인 제외) 대상
- 2) 공익법인 감사기준 제정, 감사보고서 감리근거 마련 등

④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강화¹⁾와 함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재절차 합리화²⁾를 통해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

- 1) (회사)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 (회사관계자)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이내, (외부감사인) 감사보수의 5배 이내 → 절대금액 상한없이 부과
- 2) 회계감리 과정에의 변호사 입회 허용, 조사자료 열람·복사 허용 등

③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R&D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유도*

* 제도 활성화, 세제 등 정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화 추진

② 기업간 협업이 사업화까지 연결·확산되도록 '협업 선도기업'을 지정('22년까지 200개)하고, 협업전문회사* 도입('22년까지 100개 지원)

* 기업간 협업사업을 위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③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 개선

* 대리점분야 협약체결 절차·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④ 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확대(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민간부문 임금격차 해소운동 확산

4.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남북경협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 본격화

(1) 4차 산업혁명 대비

①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 통한 성장기반 마련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적극육성

- (산업혁신)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R&D 중점투자

* 지능형 반도체 R&D('19년 300억원), 스마트공장 R&D('19년 558억원), 지능형 로봇 R&D('19년 407억원) 등

- (생활혁신)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변화를 가져올 분야에 마중물 제공

* 바이오헬스 R&D('19년 1,423억원), 자율주행차 R&D('19년 1,278억원), 스마트시티 R&D('19년 954억원), 드론 R&D('19년 634억원) 등

- (플랫폼혁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될 데이터·AI·수소 경제 분야의 R&D 투자를 통해 신산업 저변 확대

* 데이터·AI 관련 R&D('19년 4,200억원), 수소경제 R&D('19년 786억원) 등

② R&D 지원체계를 기술별(상용·기반·도전기술 등) 특성에 맞게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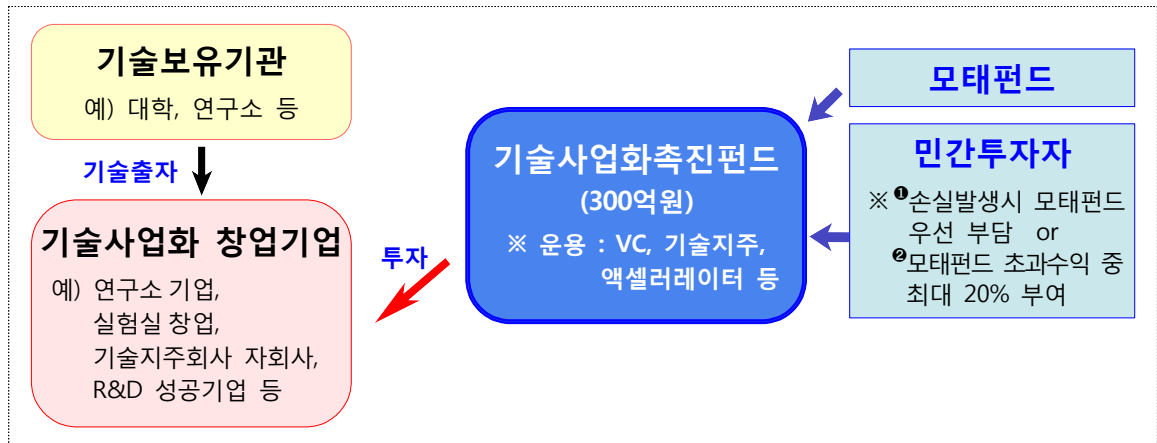
- (상용) 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¹⁾ 확대, 투자 방식의 R&D 펀드²⁾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1) ICT R&D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타('20~'24, 5,000억원) 결과를 반영해 확대 여부 결정

2) 모태펀드 등을 활용, 민간과 매칭하여 성장유망기업에 장기 R&D 투자 검토·추진

- 모태펀드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300억원)를 조성하여 대학·연구소 등에서 출자·이전받은 기술 등의 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운영방안(예시)



- **(기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에 대한 신규투자 확대

* '19년 예산 300억원, 향후 예타 결과('20~'29, 1.5조원)를 반영하여 확대 검토

- **(도전)** 경쟁형 R&D¹⁾ 및 High Risk-High Return형 R&D 지원 확대²⁾ 등을 통해 혁신적 성과 유도

1) 1~2년차에는 복수기관 지원, 3~4년차에는 중간평가에 따라 우수기관 집중 지원

2) ICT 분야 고위험 도전연구 신규투자 목표: ('18) 11.6%(233억원) → ('19) 25% → ('22) 35%

③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체계 개편

*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 규모: '18년 47조원 → '19년 53조원

-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하여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공동지원기준 마련

* 정책금융기관으로만 구성되었던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기관간 의견을 실무 조정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단'을 산업은행 내 설립

-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19.2월)하여 정책자금 간 중복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지원 성과 분석 등에 활용

*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가칭):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책자금 공급실적, 고용효과 등의 점검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집적·운영('19.2월 구축 예정)

② 플랫폼 경제 등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 위한 인프라 조성

- ① (5G)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5G 상용화 및 자율차 등 5G 융합 프로젝트 지원 강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시 최대 3% 세액공제

- ② (데이터) 교통·국토 등 분야별* 데이터의 통합 축적·활용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교통, 국토,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선정 추진('19년)

-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자기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¹⁾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²⁾ 추진

1) 정보주체(개인) 동의하에 개인정보 내려받기 및 제3자 제공을 허용

2) '18년 지원사업(금융·통신) → '19년 지원사업 확대(에너지·유통 등)

- ③ (AI)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AI 허브*」를 구축('19년)하고, '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개 육성

* ①AI 학습 데이터 + ②AI 알고리즘 + ③AI 특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제공

- ④ (수소경제)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조성 (~'22년)하고, 수소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입지) 준주거·상업지역 입지허용 등 (운영)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19.3월) 등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의 안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수소경제법」, 「수소안전법」 제정('19년)

③ 미래대비 혁신인력 양성

- ①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SW교육을 실시하고, SW 중심대학 확대(30→35개)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19.下 개교)

* 학력·전공 등 제한 없이 선발하는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

- 복수학위제 시행 · 확산을 통해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학문간 융 · 복합 교육기반 마련

* 재학 중 서로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 학위를 받는 제도로 '19년 경인지역 14개 대학 시행 예정 → 타 대학으로 확산 지원(예 : 행복기숙사 건립지원 우대 등)

② 기업이 주도하는 첨단 융·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방안 마련*, 인공지능 대학원 등 혁신교육 프로그램 도입

* 인프라를 보유한 선도기업 참여, NCS 및 훈련과정 통합심사 적용 완화 또는 제외, 주입식 · 강의식이 아닌 현장훈련, 프로젝트 기반 실습 등 효과적 훈련방식 확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

* 중요 산업 분야의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15세 이상 실업자, 고3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훈련비 등 지급)

- 혁신성장 청년인재(1,200→1,400명)¹ 및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1,000→1,300명)² 양성 확대

1] 교육기관 · 기업 컨소시엄이 졸업예정자 · 취업준비자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 SW 교육(6개월)을 제공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인력 양성

2]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AR·VR, 드론 등 신산업 8개 분야 인력 양성(15세 이상 실업자, 대졸(예정)자 대상 훈련비 등 지급)

③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전직 직업훈련 강화 병행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中企·비정규직, 45세 미만 대기업 저소득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훈련 사각지대 해소

*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대기업 45세 미만 제외) 등을 대상으로 훈련비 지원중('17년중 약 47만명 지원)

- 신중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¹(10→14개) 및 희망리턴패키지²(9천→2.2만명) 확대

1] 50세 이상 구직자 대상으로 시니어헬스케어, 자동차 복원, 특수용접 등 교육 지원

2] 폐업(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등 지원

(2) 저출산·고령화 대응

① 인구변화 대응 강화

① 국토·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 인구변화 예측력 강화를 위해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단축(5→2년)

②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18.12.7)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에 역량집중

- * 영유아 의료비 단계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근무시간 유연화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 등

③ 체류기간 연장, 동반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 신설('19.上)

- * 고연봉, 고학력, 높은 전문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학자 및 국제기업가, 고급기술인재

-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 (예)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자가 국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② 출산 및 양육지원 강화

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출산급여를 지급(월 50만원, 90일, '19.7월부터 시행)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

- * '19년중 2.5만명 지원 예상, '20년부터 연간 5만명 지원 예상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¹⁾하고,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²⁾하는 등 일·육아 병행여건 개선

1) 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 통상임금의 100% 지원(한도 월 200만원)

2) 의무설치 대상 확대(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와 함께 중소기업 설치지원 확대 검토

- ③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¹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을 인상²하여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

1」 유급휴가 3→1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분 급여 지급(상한 월 200만원)
 2」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200→250만원

- ④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 목표(40%)를 1년 조기 달성** 추진('22→ '21년)

- '19년중 **어린이집**(550개소), **유치원**(1,000개 학급) 이상 신·증설 추진

[3] 남북경협 준비 본격화

- ① 비핵화 진전 등 여건 조성시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의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하여 뒷받침

- ② 북한의 **국제금융기구**(IMF, WB) 가입 지원 등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 및 참여 유도

- ③ 여건 조성시, 남북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중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남북간 산림협력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추진

- 남북 공동특구 구상 구체화를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 등 추진

[4] 중장기 비전과 전략 제시

- 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19.上)

- (**혁신성장**) **산업생태계**의 혁신성·역동성 제고, 기술·인재·제도 고도화 등 생산성 기반 강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 (공정경제) '기회 → 경쟁 → 보상' 전반의 공정한 경쟁질서 구축 및 가치 배분체계의 형평성 제고
 - (포용사회)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 가능한 중부담·중복지 구조로의 전환기반 마련
 - (지속가능 발전) 편리한 국토·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고, 고루 잘 사는 지역 주도 발전체계 구축
- ② 4차 산업혁명 등 중장기 도전요인 대응을 위해 「혁신성장·미래전략 관계장관회의」 신설·운영

V. 16대 중점 추진과제

◇ 16대 과제는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 집중 점검·관리

Big Project

- ▶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α) 착공 지원
- ▶ 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 발굴·조기 추진
- ▶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Big Deal

- ▶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 ▶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확산
- ▶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Big Innovation

- ▶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 ▶ 중소·벤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생태계 보강
- ▶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Big Trust

-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 ▶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부담 경감
-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1. 상반기 중 대규모 프로젝트(Big Project)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내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

중점 추진과제

- 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α) 착공 지원
- ② 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 발굴·조기 추진
- ③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④ 재정 조기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① 행정절차 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여 6조원+α 규모의 대규모 기업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

*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6조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7조원), 자동차 주행시험로(0.2조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0.5조원)

② 제도개편 등 통해 6.4조원+α 규모의 대형 민자사업 조속 추진

*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1.5조원+α),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4.9조원+α)

-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민간투자법 개정, '19.上)

* (現)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 → (改) 모든 공공시설 허용

- 비용/편익 분석기관을 다원화하여 민자사업 신속 추진('19.上)

* (現)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B/C 분석 시행 → (改) 일정규모(총사업비 500억원 등) 미만은 여타 전문기관(국토연·교통연 등)으로 이양

③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 면제 지원 사업 확정('19.1/4), 내년 중 조기 사업착수 추진

-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6조원)은 회계연도 개시 前 예산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 통해 조기 추진('19년중)

* 국고보조율 : 문화(現 40%)·체육(30%) 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시 50%까지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 ④ 역대 최고수준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1%)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결산 즉시 지원(4월)
-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위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 9.5조원 확대

2. 첨예한 이해관계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 (Big Deal)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

중점 추진과제

- ①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 ②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③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확산
- ④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 ① 이해관계자 상생방안과 함께 숙박공유 확대 추진, 카셰어링 및 공간 공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마련('18.12월)

- ②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19년)

- 스타트업 등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18.12월)

- ③ 14분기 중 노사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수요에 맞춘 다양한 모델 발굴·지원

* 모델 선정 방식, 근로자·기업 우대 지원을 위한 지침·규정 등 마련

- ④ 임금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상반기 중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방안 마련

*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우선 추진

3. 산업부문 혁신(Big Innovation)은 과거와 달리 확실하게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

중점 추진과제

- 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②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수립
- ③ 중소·벤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생태계 보강
- ④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 ①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18.12월)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 실적 점검 강화

▶ 자동차	부품업체 유동성 지원,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대폭 확대, 미래차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 조선	중소·기자재업체 금융지원(1.7조원), '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 발주 등
▶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R&D 투자('19~'25년 5,281억원) 등
▶ 석유화학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19~'23년, 약 90만평) 등

- ②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속 입법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유망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수립

*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 및 규제개선 건의 등을 발굴, 정책개발 뒷받침

- ③ 중소·벤처기업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선순환 생태계 보강을 위한 금융·세제·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 일괄담보제 도입(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묶어 담보로 활용),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 등 통해 성장 지원
-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¹⁾ M&A시 법인세 감면을 '21년말까지 연장 지원²⁾

1)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2)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일몰기한을 '18년말 → '21년말로 연장)

④ 8대 선도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상반기중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지원방안 마련

▶ 스마트공장·산단	(공장) '19년 4천개, '22년까지 3만개(제조공장의 1/2) 보급 추진 (산단) '19년 2개 산단 시범사업 실시, '22년까지 10개 조성 목표
▶ 미래차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 수립(1/4분기)
▶ 핀테크	非금융사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결제 허용(상반기)
▶ 바이오헬스	신약개발 위한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 등

4.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Big Trust)하되,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추진된 **일부 정책은 보완**

중점 추진과제

- 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 ②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부담 경감
- ③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④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마련('19.上)

- * 복권(중등~대학)·체육진흥기금(초등~고등) 장학사업(월 30~45만원) 각 1,500명 신설
- *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19년): (의·차·한)정원外 5% 이내 신설 (법)정원內 5→7% 이상

② **EITC 대폭 확대, 카드수수료 경감, 임대차 보호 강화** 등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소득기반 확충 및 부담 완화

- * 영세자영업자(10억원 이하)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확대(年 최대 500→1,000만원)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및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 마련

③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 중 공청회, 전문가 논의 등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 구축 위한 제도설계·근거법령 제정 추진

④ 시장 우려 조기 불식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편**(최저임금법), **탄력근로시간제 확대**(근로기준법) 관련 **입법을 2월중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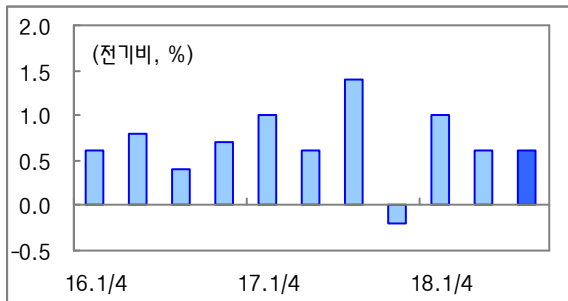
I. 최근 경제동향과 2018년 전망

1. 경제성장

① (성장) 수출·소비는 양호하나, 투자 부진으로 '18년 2.6~2.7%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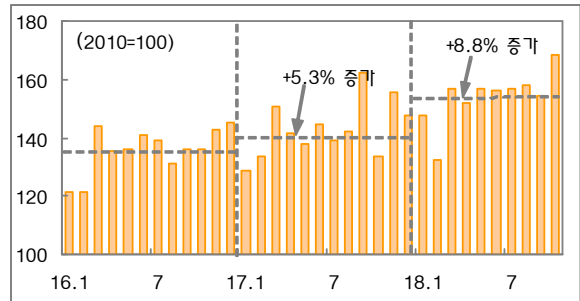
- (실질성장률) 하반기 투자 부진이 심화되며 당초 전망(2.9%) 하회
 - 수출·소비 등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3/4분기 들어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며 성장세 약화

GDP 성장률



*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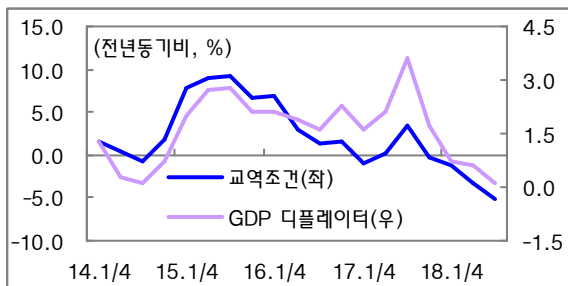
수출 물량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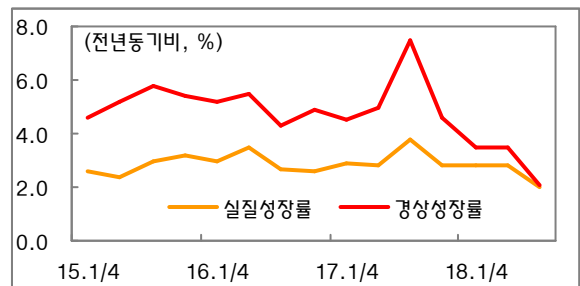
- (GDP 디플레이터) 유가 큰 폭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영향으로 소비자물가(1.6%)를 하회하는 연간 0.6% 상승 예상
- (경상성장률) 3/4분기까지 3.0% 성장하였으며 '18년 연간으로는 3.3% 성장 예상

교역조건과 GDP 디플레이터



* 출처 : 한국은행

경상성장률



* 출처 : 한국은행

2 [민간소비]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며 연간 2.8%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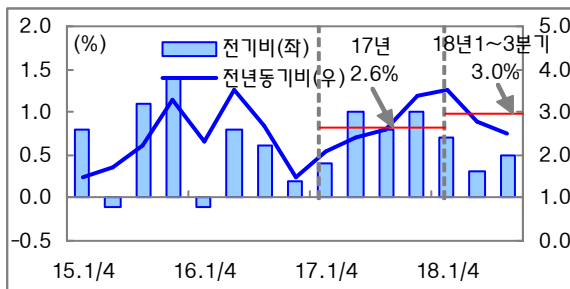
- 고용부진 · 소비심리 약화 등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 지속

* 민간소비(전년비, %): ('16)2.5 ('17)2.6 ('18.1/4~3/4)3.0

* 소매판매(전년비, %): ('16)3.9 ('17)1.9 ('18.1/4~3/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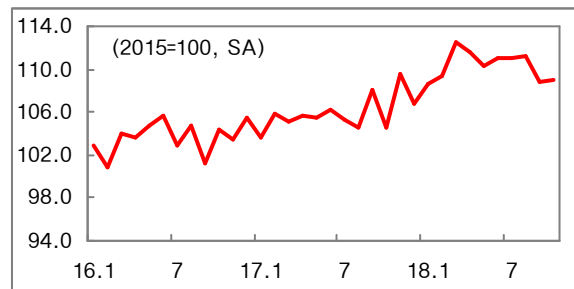
- 해외소비는 소득증가 등에 따른 해외여행 확대에 증가세 지속

민간소비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소매판매 지수



* 출처 : 통계청

3 [설비투자] '17년 기저, 기계류 투자 감소 등으로 1.0% 감소 예상

- '17년 대규모 투자 확대에 따른 기저, 美·中 통상분쟁 심화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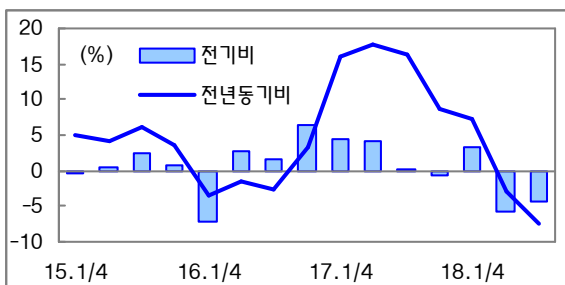
*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 ('17.4/4) 95 ('18.1/4) 96 (2/4) 95 (3/4) 94 (4/4) 93

- 기계류 투자는 반도체 장비 도입이 둔화되며 감소하였으나, 운송장비 투자는 항공기 투자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전년동기비, %): ('18.1/4)72.3 (2/4)0.7 (3/4)△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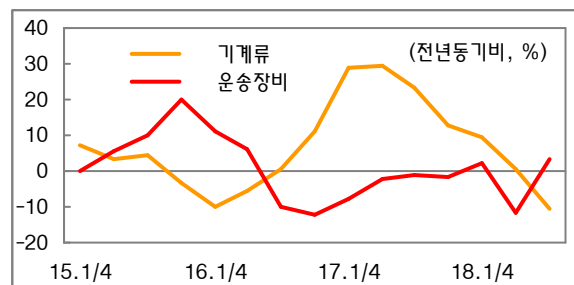
* 항공기 수입(전년동기비, %): ('18.1/4)65.6 (2/4)△5.1 (3/4)11.8

설비투자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형태별 설비투자



* 출처 : 한국은행

4 [건설투자] 건물과 토목이 모두 부진하며 2.8% 감소 예상

○ 건물건설은 '15~'16년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이 점차 준공되는 가운데, 주택착공이 감소하며 크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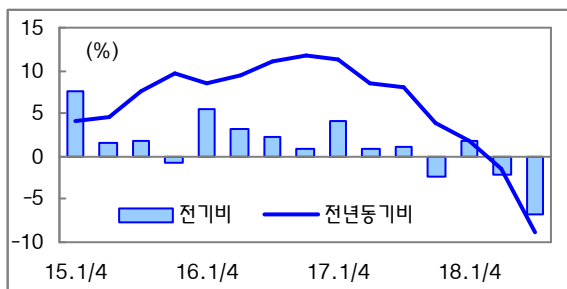
* 주택준공(만호, 월평균) : ('16)4.3 ('17)4.7 ('18.1~10)5.1

* 주택착공(만호, 월평균) : ('16)5.5 ('17)4.5 ('18.1~10)3.6

○ 토목건설은 SOC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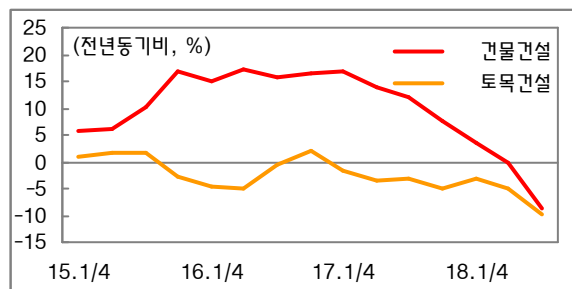
* SOC 예산(조원) : ('15)26.1 ('16)23.7 ('17)22.1 ('18)19.0 [△14.0%]

건설투자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형태별 건설투자



* 출처 : 한국은행

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양호한 R&D 투자 등으로 2.5% 증가 예상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SW 투자는 둔화되었으나, 신산업 부문 R&D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완만한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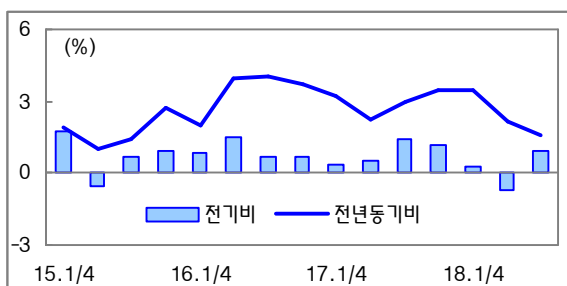
* 소프트웨어생산지수(전년동기비, %) : ('17.4/4)3.9 ('18.1/4)4.6 (2/4)3.3 (3/4)1.2

○ 정부부문은 R&D 예산 증가세 축소 등으로 다소 둔화, 민간부문은 영업이익률 개선 등으로 증가세 지속

* R&D 예산(조원) : ('15)18.9 ('16)19.1 ('17)19.5 ('18)19.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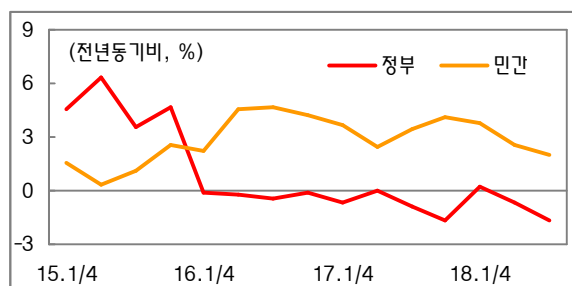
* 매출액영업이익률(% , 한은) : ('17.3/4)7.4 (4/4)6.1 ('18.1/4)7.4 (2/4)7.7 (3/4)7.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출처 : 한국은행

주체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출처 : 한국은행

2.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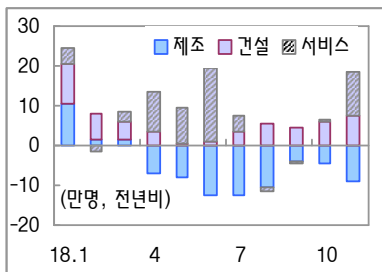
◇ [취업자수] 취업자 증가가 둔화되며 '18년은 10만명 증가 예상

○ 일자리 어려움이 확대되며 지난해 대비 고용 증가폭 축소

* 취업자(만명, 전년비): ('17)31.6 ('18.1/4)18.3 (2/4)10.1 (3/4)1.7 (10)6.4 (11)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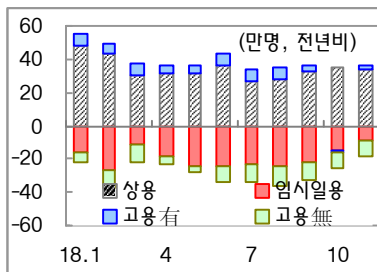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도 전년대비 증가폭 축소·둔화
- 상용직은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 부진으로 임금근로자 축소, 자영업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심으로 위축
- 50대 및 6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30~40대는 감소, 청년은 9월 증가 전환된 이후 증가폭 점차 확대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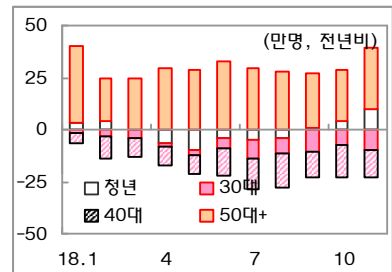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 출처 :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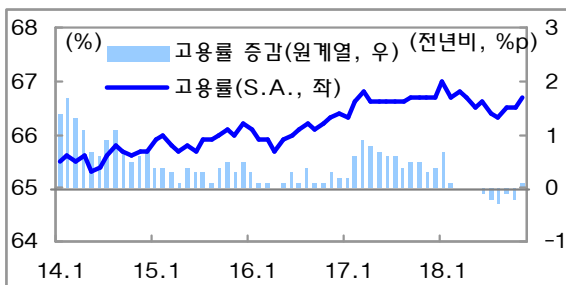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 [고용률·실업률] 고용률 소폭 상승, 실업률도 다소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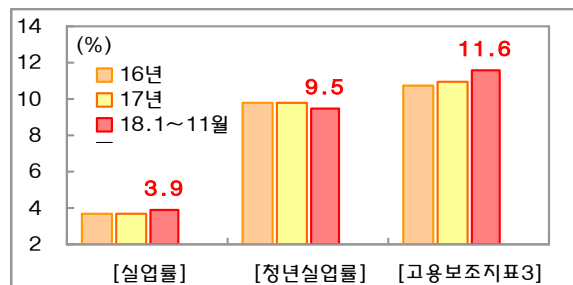
○ 고용률은 취업자 둔화에도 인구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 실업률도 신규채용 위축, 구조조정 등이 복합 작용하며 상승

고용률(15~64세)



* 출처 : 통계청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3



* 출처 : 통계청

3. 물가와 주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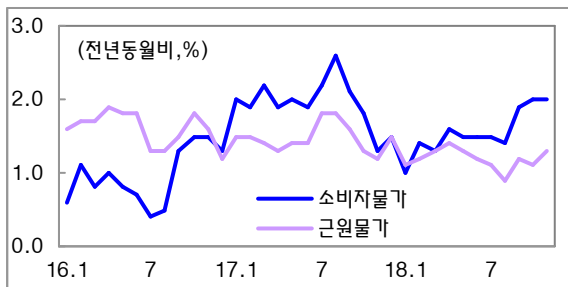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18년 1.6% 상승 예상

- '18년 소비자물가는 폭염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산물·석유류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1.6% 상승 전망

* 두바이 유가(\$/b): ('17) 53.2 ('18^e) 70 [전년비+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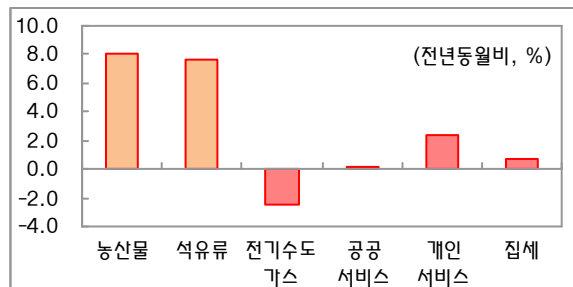
-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대 초반 유지

소비자물가



* 출처 : 통계청

'18.1~11월 품목별 상승률



* 출처 : 통계청

◇ [주택시장] 매매시장·전월세시장 모두 안정세

- 주택 매매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 8월 이후 단기급등했던 서울 주택가격도 9.13 대책 後 크게 완화

* 서울 주간아파트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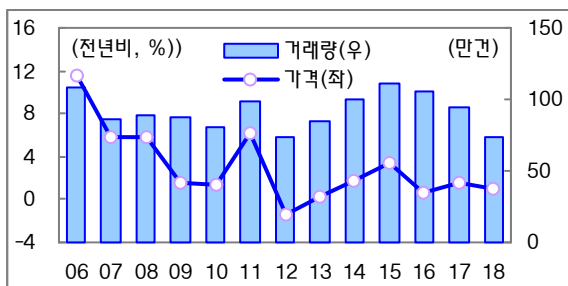
(9.1주)0.47 (2)0.45 (3)0.26 (4)0.10 (11.1주)0.00 (2)△0.01 (3)△0.02 (4)△0.05 (12.1주)△0.06

- 전·월세가격도 신규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 지방의 경우 공급과잉·산업침체지역 중심 하락세

* 전세가격(전년동기비, %) : ('15)4.8 ('16)1.32 ('17)△0.63 ('18.1~11)△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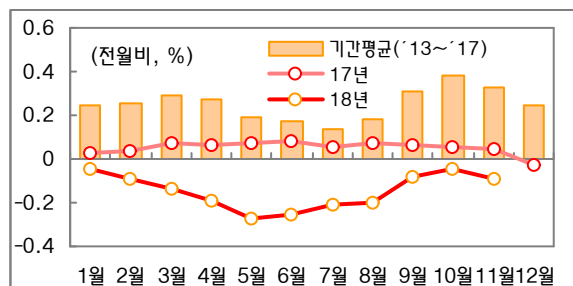
월세가격(전년동기비, %) : ('15)1.7 ('16)△0.17 ('17)△0.32 ('18.1~11)△0.98

주택 매매가격과 월평균 거래량¹⁾



주1) '18년은 1~10월 * 출처 : 국토부, 감정원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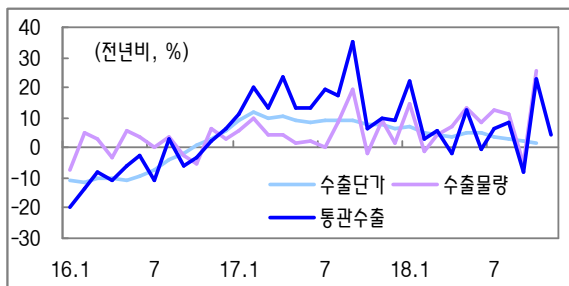
* 출처 : 한국감정원

4. 수출입과 경상수지

◇ (수출입) 연간 통관 수출 6.1%, 수입 12.5%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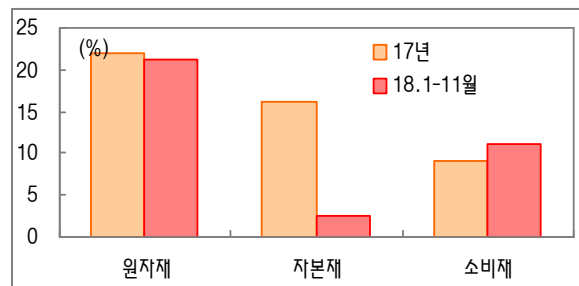
- 수출은 세계경제 및 IT경기 호조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 지속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반도체·컴퓨터·석유화학 등 증가
선박·자동차·철강 등은 감소
 - * 품목별 수출('17.1~11→18.1~11, 전년비, %): (석유제품)36.3 (반도체)33.5
(컴퓨터)20.8 (유화)13.9 (일반기계)11.4 (철강)△0.4 (자동차)△4.1 (선박)△54.4
 - 지역별로는 중국·일본·EU·아세안·미국 등 대부분 지역에
대해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對 중남미·중동은 부진
 - * 지역별 수출('17.1~11→18.1~11, 전년비, %): (중국)17.2 (일본)15.6 (EU)5.3
(아세안)5.1 (미국)4.8 (중남미)△0.3 (중동)△9.8
- 유가 상승 등으로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등으로 자본재 수입은 증가세 둔화

통관수출과 수출물량·단가



* 출처: 관세청, 한국은행

성질별 수입



* 출처: 무역협회

◇ (경상수지) 전년(785억불) 대비 줄어든 740억불 흑자 예상

- 상품수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와 함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증가하면서 '17년과 유사한 수준 전망
- * '18.1~10월 상품수지 증감(억불): (전체)23.8 (상품수출)472.1 (상품수입)448.2
- 서비스수지는 운송 및 지재권 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건설수지 등이 개선되며 적자폭은 전년보다 감소 예상
- * '18.1~10월 서비스수지 증감(억불): (전체)15.4 (건설)8.5 (운송)△0.4 (여행)3.3 (지재권)△5.6

II. 2019년 대외여건 점검

1. 세계경제

◇ [성장]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나, 하방리스크 확대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나, 통상마찰, 미 금리인상 등 리스크가 확대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세 전망
 - 미국은 올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감세효과 약화, 통상분쟁 영향 본격화 등으로 내년부터 성장세 점차 둔화 예상
 - 유로존은 고용상황 개선과 확장적 재정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이탈리아 재정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 잠재
 - * S&P, 이탈리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조정(10.26)
 - 일본은 소비세 인상('19.10월 예정)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나 2020 동경 올림픽 관련 수요 등이 일부 영향 상쇄 예상
 - 중국은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인한 투자 감소 및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성장세 점차 둔화 전망
 - 신흥국은 인도, 아세안 5국 중심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아르헨티나, 터키 등 일부 금융불안 취약국은 부진 예상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실 적			전 망			
	'18년			'18년 연간		'19년 연간	
	1/4	2/4	3/4	IMF	OECD	IMF	OECD
세계경제 성장률	-	-	-	3.7	3.7	3.7	3.5
미 국(전기비연율)	2.2	4.2	3.5	2.9	2.9	2.5	2.7
유 로(전기비)	0.4	0.4	0.2	2.0	1.9	1.9	1.8
일 본(전기비)	△0.3	0.7	△0.6	1.1	0.9	0.9	1.0
중 국(전년동기비)	6.8	6.7	6.5	6.6	6.6	6.2	6.3
인도(전년동기비)	7.7	8.2	7.1	7.3	7.5	7.4	7.3
브라질(전년동기비)	1.2	0.9	1.3	1.4	1.2	2.4	2.1

◇ (교역량·물가) 세계 교역은 둔화, 세계물가는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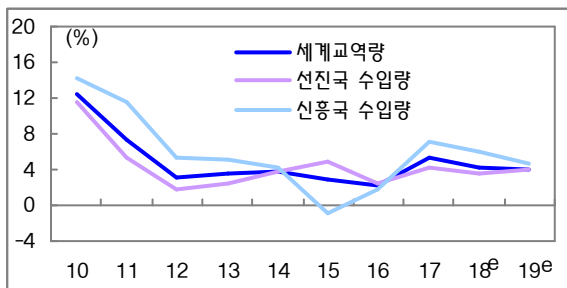
- 세계교역량은 글로벌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전망

* 세계교역량(% , IMF, '18.10) : ('15) 2.8 ('16) 2.2 ('17) 5.2 ('18^e) 4.2 ('19^e) 4.0

- 세계물가는 원자재가격 둔화 등으로 금년 수준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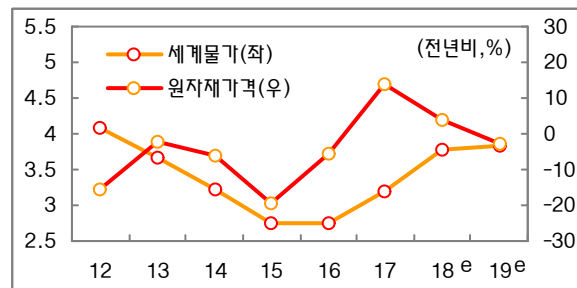
* 세계물가상승률(% , IMF, '18.10) : ('15) 2.8 ('16) 2.8 ('17) 3.2 ('18^e) 3.8 ('19^e) 3.8

세계교역량 증가율 추이



* 출처 : IMF

세계물가와 원자재 가격



* 출처 : IMF

◇ (리스크) 글로벌 통상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 하방 요인 상존

- 무역갈등 심화시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GVC) 변화 등으로 글로벌 투자·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 예상

-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및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

* Fed 금리인상 예상(주요IB) : (금년) 추가 1회 ('19년) 3회 ('20년) 1회

* CDS프리미엄(bp, '17년말→'18.12.12) : (아르헨티나)232→699 (터키)164→390

- 중국은 기업부채와 그림자 금융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통상분쟁 심화 및 장기화시 둔화 가속화 우려

- 유로존은 이탈리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이 하방요인으로 잠재

2. 국제원자재가격

유가 및 비철금속 하락, 곡물 소폭 상승 전망

◇ [국제유가] '19년 평균 65\$/B 예상(두바이유 기준)

○ '19년 국제유가는 미국 등의 생산증가 및 중국 등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증가폭 축소 등으로 '18년보다 낮은 65\$/B 전망

* 미국 원유생산 전망(EIA 12월, 백만배럴/일): ('18.상)10.4 (하)11.4 ('19.상)12.0 (하)12.2

** 세계 석유수요 전망(EIA 12월, 전년비, %): ('17) 1.7 → ('18^e) 1.6 → ('19^e) 1.5

▪ 주요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 등은 상방압력으로, 경기둔화 우려, 무역분쟁 등은 하방압력으로 작용

* OPEC+회의(12.7일)에서 주요 산유국은 120만배럴/일('18.10월 생산 대비, '19.1~6월) 감산을 결정

주요 기관들의 '19년 국제유가 전망 (\$/B, 기간평균)

기관 (전망시점)	유종	'16	'17	'18		'19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에경연('18.12월)	Dubai	41	53	70	70	67	64	66	68	70
CERA('18.11월)	Dubai			70	74	73	74	74	71	73
EIA('18.12월)	Brent	45	55	71	69	61	60	60	61	63

◇ [국제곡물·비철금속] 국제곡물 강보합, 비철금속 하락

○ (국제곡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완만한 가격상승이 예상되나,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감소 등 하방요인도 존재

* '18-19년 엘니뇨 발생('17-18년 미발생) 확률이 70% 정도로 추정(美 국립해양대기청, '18.8)

○ (비철금속) 통상마찰, 중국 등 주요국 성장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가격하락 전망

국제곡물·비철금속 가격 상승률 전망

(전년비, %)	옥수수	밀	대두	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17년	△2.9	1.5	△1.1	22.7	26.7	8.5	38.3
'18년	7.2	34.3	△4.6	9.0	6.0	31.9	0.0
'19년	5.6	17.1	△3.1	△1.9	△5.1	0.3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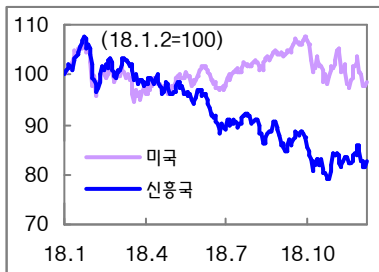
* 자료 : IMF('18.10월)

3. 국제금융시장 리스크요인에 따른 변동성 지속

◇ [시장 지표] 美-中 갈등,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변동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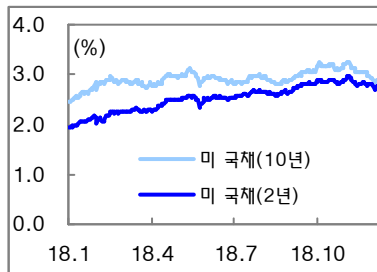
- (주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 美-中 갈등, 브렉시트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조정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 * '17년말 대비 상승률(18.12.12, %): (美)△0.8(유럽)△11.3(日)△5.1(中)△21.3(韓)△15.6
- (금리) 美 연준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유지시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나, 경기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환율) 주요국 경기여건 및 통화정책 방향 차이 등에 따라 변동성 지속 예상

주요국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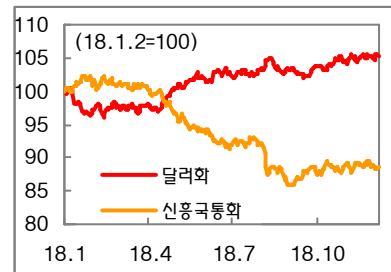
* 자료 : Bloomberg

주요국 금리



* 자료 : Bloomberg

주요국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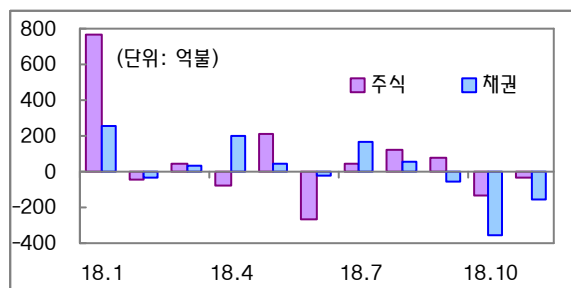


* 자료 : Bloomberg, 우상향시 절상

◇ [자금유출입] 국제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성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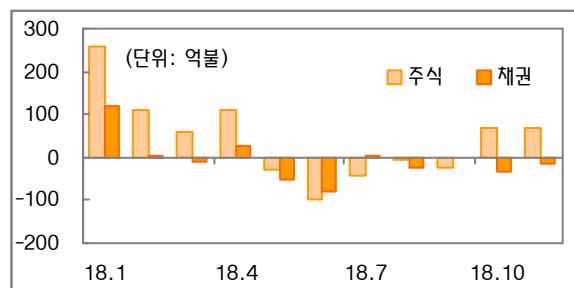
- 주요국 증시조정 및 美 금리 상승 지속여부 등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자금유출입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

선진국 자금유출입 변화



* 자료 : EPFR

신흥국 자금유출입 변화



* 자료 : EPFR

Ⅲ. 2019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1) [실질 GDP] 연간 2.6~2.7% 성장 전망

① (성장흐름) '18년과 유사한 연간 2.6~2.7%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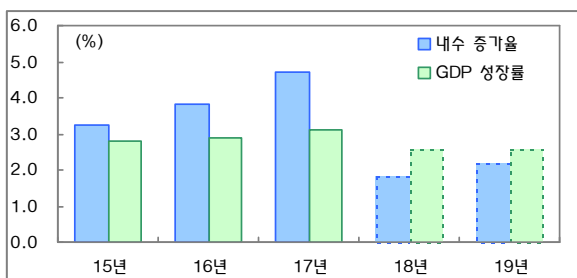
- 상반기는 세계교역 둔화, 통상마찰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나 재정조기집행 등 정책노력이 성장세 보완
- 하반기는 EITC 개편 등 정책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근로장려금 중 '18년 소득분은 '19.9월, '19년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지급 예정

② (내수·수출) 수출이 다소 둔화되나, 투자 부진은 완화 예상

- 내수는 소비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투자는 '18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투자 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부진 완화
- 수출은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물량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반도체 등 수출단가가 하락하며 증가세 둔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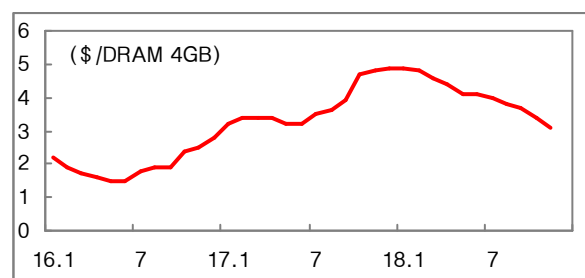
GDP 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 '18~'19년은 정부전망

반도체 단가 추이



* 자료 : DRAM Exchange

(2) [경상 GDP] 연간 3.9% 성장 전망

- 유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교역조건이 금년보다 개선되며,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8년보다 확대된 1.2% 전망
- 경상성장률은 '18년(3.3%)보다 상승한 연간 3.9% 예상

◇ (민간소비) 연간 2.7% 증가 예상

- (소득여건) 고용상황은 개선되었으나, 임금상승률은 '18년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소폭 둔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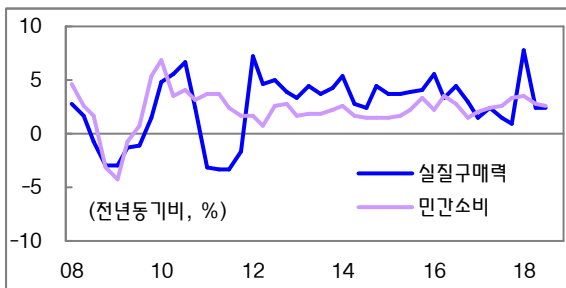
* 최저임금상승률(%): ('18)16.4→('19)10.9 / 공무원임금상승률(%): ('18)2.6→('19)1.8

- 기초연금·ETTC 등 복지분야 예산확대(+16.4조원, 11.3%)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는 소득여건 보완

* 주요복지재정 증액('18년대비) : ①ETTC확대개편(약+3.5조원), ②기초연금 인상(+2.4조원) ③아동수당(+1.5조원), ④의료급여 인상(+1.0조원), ⑤주거급여 인상(+0.4조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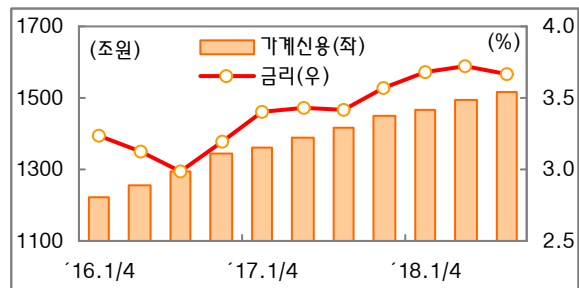
- (자산여건) 주택 가격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높은 가계부채 부담 및 시중금리 상승 등은 소비 제약 요인

가계 실질구매력과 민간소비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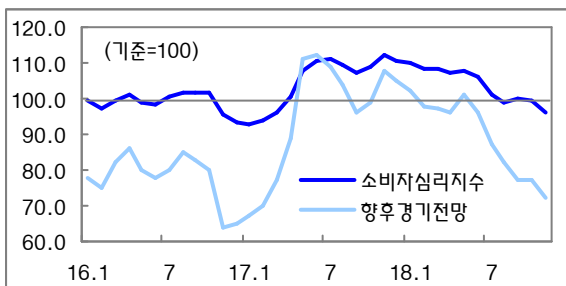
가계신용과 가계부채 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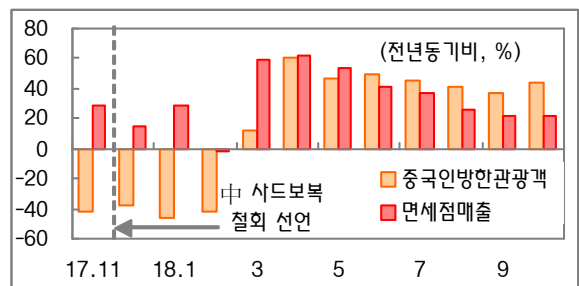
- (기타) 향후 대외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은 소비심리 제약요인으로 작용, 다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은 국내소비에 긍정적 영향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중국인 방한 관광객 추이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관세청

- ('19년 전망) 금년보다 소폭 둔화되었으나, 복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2.7%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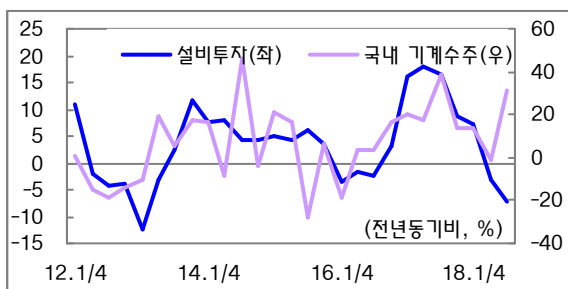
◇ [설비투자] 연간 1.0% 증가 전망

○ (투자여건) 美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성장 둔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기업투자 심리 위축

- 다만,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 기업 영업 이익률 상승, 제조업 가동률 개선, 투자활성화 정책 등은 상방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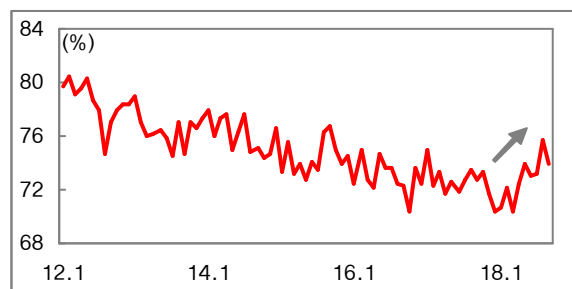
* 매출액 영업 이익률(% , 한은) : ('17.3/4)7.4 (4/4)6.1 ('18.1/4)7.4 (2/4)7.7 (3/4)7.6

설비투자와 기계수주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제조업 평균 가동률



* 출처 : 통계청

○ (업종별 여건) IT, 자동차 등 전반적인 제조업 투자는 둔화, 통신업, 운수업 등 비제조업 투자는 개선

- OLED 수요증가 등 디스플레이 업황은 개선되겠지만, 반도체 시장 조정 등으로 IT 업종 투자 둔화 가능성

* 세계 반도체 시장(% , WSTS) : ('17) 21.6 ('18) 15.9 ('19) 2.6

- 자동차·철강 등 업종도 해외생산 증가, 업황 부진 등으로 유지보수 중심의 보수적 투자 예상

* 설비투자계획(산은, 조원, '18→'19) : (자동차) 8.6→7.6 (철강) 2.8→2.7

- 다만, 5G 상용화 및 관련 분야 세제지원, 여행객 증가 등으로 통신업·운수업 투자 등은 증가할 전망

* 항공 여객운송업 생산(전년동기비, %) : ('17.4/4)14.9 ('18.1/4)5.6 (2/4)11.5 (3/4)6.7

○ ('19년 전망) 대외불확실성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비제조업 투자 개선, 정책효과 등으로 1.0% 증가 전망

◇ [건설투자] 연간 2.0%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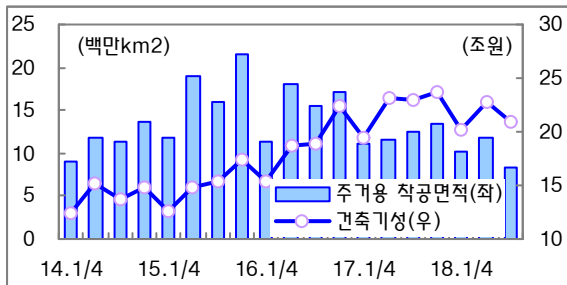
- (주택건설) 신규분양 감소 등으로 건물수주·주택착공 등 선행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속 둔화

* 분양물량(만호, 주산연) : ('16)46.9 ('17)31.2 ('18°)28.3 ('19°)22.5

* 주택 건물수주(전년동기비,%): ('17.4/4)△16.1 ('18.1/4)△7.6 (2/4)△19.8 (3/4)△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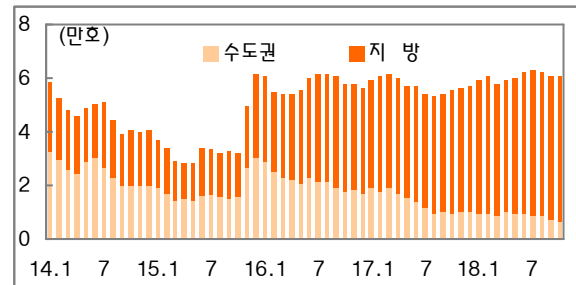
- 다만,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도시재생사업 투자 증가 등이 주택건설 부진을 보완할 전망

주택 착공면적과 건축기성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청

미분양 주택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 (비주거용 건물건설) 상업용 건물 공실률 상승, 기업 설비투자 둔화 등 비주거용 건물 착공 감소는 제약요인

*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 : ('17.上)12.0 (下)12.0 ('18.上)13.0 (3/4)12.7

* 비주거용 건물 착공면적(전년동기비, %) : ('17.上)△1.0 (下)△3.4 ('18.上)△4.0 (3/4)△8.2

- 다만, 관광인프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 예산 증가, 공장증설 등 기업 조기 착공 지원 등은 상방요인

* 생활밀착형 SOC 예산(조원) : ('18)5.8 → ('19)8.6 [+2.8조원]

- (토목건설) SOC 투자와 공공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 토목 수주 증가 등으로 토목건설은 다소 증가할 전망

* SOC 예산(조원) : ('16)23.7 ('17)22.1 ('18)19.0 ('19)19.8 [+4.0%]

* 민간 토목 수주액(조원, 경상) : ('16)7.7 ('17)9.4 ('18.1~10)12.0

- ('19년 전망) 주택건설 감소세가 확대되나, SOC 및 공공투자 확대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감소폭 축소 예상(△2.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2.8% 증가 전망**

○ (R&D투자) 민간 R&D는 신성장 R&D 세제혜택 확대*, 연구 인력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신산업 중심으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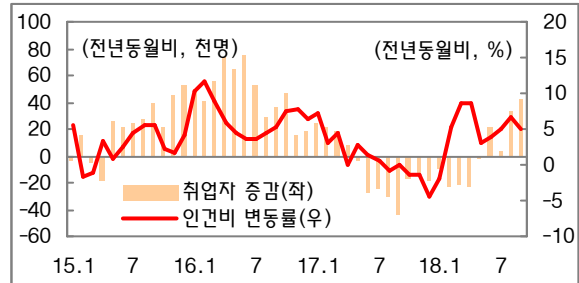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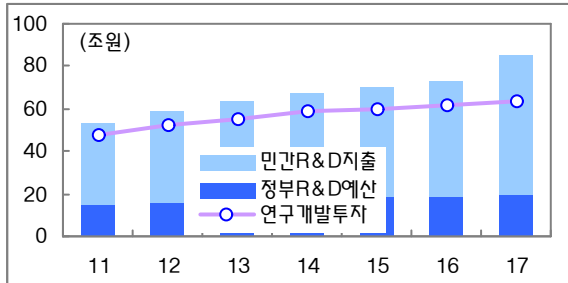
*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18년말→21년말) 및 블록체인·양자컴퓨터 관련 R&D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정부 R&D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도 투자 확대 요인

* 정부 R&D예산 증가율(%) : ('15)6.7 ('16)1.1 ('17)2.0 ('18)0.6 ('19)4.4

▪ 다만, 제조업 업황 부진 우려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

정부, 민간 R&D 지출과 R&D 투자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및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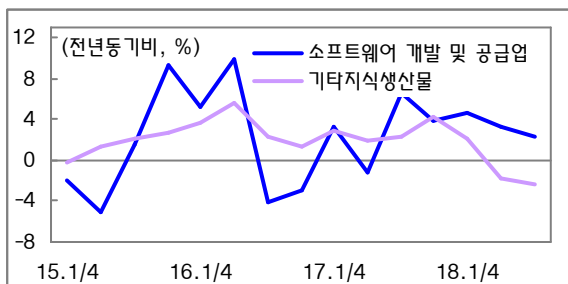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출처 : 통계청, 고용노동부 ** 3개월 이동평균

○ (기타 지식재산생산물)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 관련 SW 시장 성장,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등으로 완만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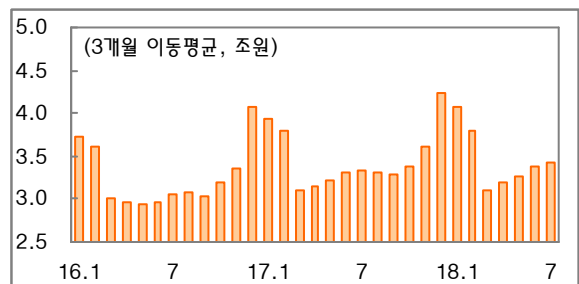
* 국내 SW 시장 성장률(IDC, %) : ('16)2.1 ('17)4.7 ('18^e)3.5 ('19^e)3.1

기타지식재산생산물과 S/W 개발업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소프트웨어 생산량 추이



*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19년 전망) 정부 R&D 예산 증가 등 신성장 분야 중심으로 R&D 투자가 확대되며 2.8% 증가 전망

2. 고 용

① (노동수요) 일자리 정책 등은 긍정적, 건설투자 부진 등은 제약요인

- (기업 인력사정)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기업심리 위축 등은 부정적 요인이거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등이 이를 보완

* BSI 지수: ('17)78 ('18.1/4)77 (2/4)80 (3/4)75 (10~11)74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인원(만명): ('18.추경) 9 → ('19)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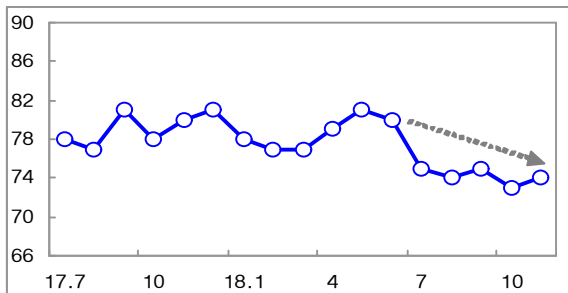
- (산업별) 건설업은 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인력수요 감소 예상, 제조업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어려움 지속 전망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업 중심의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구조적 제약요인 상존

* 보건·복지업 취업자(만명, 전년비) : ('18.1/4) 5.1 (2/4) 14.8 (3/4) 14.2 (10) 15.9 (11)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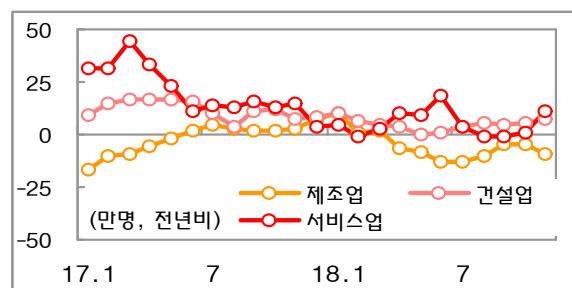
* 무점포소매 판매지수 증가율(%): ('15)8.0 ('16)14.2 ('17)12.8 ('18.1~10)14.7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출처: 한국은행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 출처: 통계청

- (기타)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은 노동 수요에 긍정적 영향 기대

* 보건·복지·노동예산(조원) : ('18)144.6 → ('19)161.0 <일자리 19.2 →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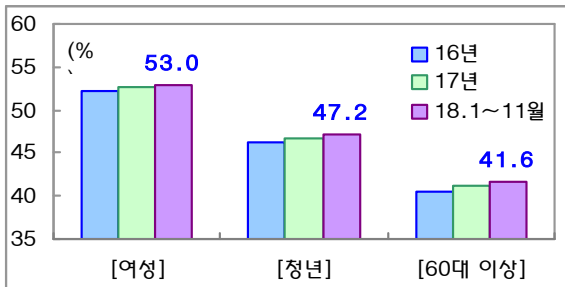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4년) : (전산업)12.5 (사회복지)41.0 (보건의료)14.4

- 현장중심 공무원 증원(+3.2만명), 노인일자리 확대(+10만명) 등 직접 일자리 창출 확대

2 [노동공급]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제활동참가 확대가 일부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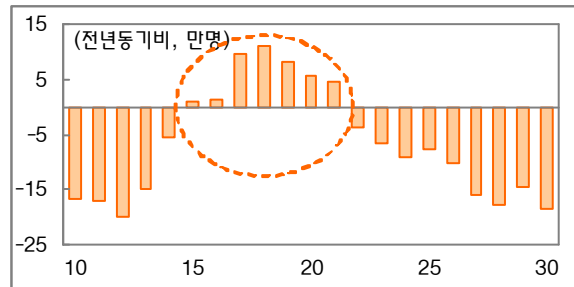
- '19년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확대(장래인구 추계: ('18)△4.6 → ('19)△6.8만명)되며 취업자 증가 제약요인으로 작용
 -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장년층(55세 이상) 노동시장 잔류 등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노동공급 위축을 일부 보완
 - 에코붐 세대('91~'96년생, 20대 후반)의 노동시장 본격 진출로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나며 구직경쟁 심화 예상
- * 청년경제활동참가율(%,'18.1~11): (15~19세)8.2 (20~24세)49.1 (25~29세)76.9

여성·청년·고령 경황률 추이



* 출처 : 통계청

20대 후반(25~29세) 인구증감



*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기타] 중국인 관광객 회복속도, 자영업 과당경쟁 등도 영향 요인

- 中관광객 회복세 등은 도소매·숙박음식 등 고용개선에 영향
 - 자영업의 경우 장년층 노동시장 잔류 등에 따른 유입이 지속 되겠지만 과당경쟁, 내수 둔화 등으로 어려움 지속 전망
- * 고용원無 자영업자(만명, 전년비) : ('18.1/4) △8.9 (2/4) △5.8 (3/4) △11.4 (10)△10.1 (11)△9.2
 * 고용원有 자영업자(만명, 전년비) : ('18.1/4) 6.5 (2/4) 5.5 (3/4) 5.9 (10)△0.4 (11)1.5

4 ['19년 전망] 취업자 15만명 증가 예상

- '19년 고용 증가는 '18년(10만명)보다 개선된 15만명 예상
- 고용률(15~64세)은 '18년(66.7%)보다 다소 개선된 66.8%, 실업률은 '18년(3.9%) 대비 소폭 하락한 3.8% 전망

3. 소비자 물가

◇ (소비자 물가) '19년 연간 1.6% 상승 전망

- (여건) 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며 수요압력은 완화되나,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등 공급측면에서는 상하방 요인 혼재

* 두바이유(\$/b): ('17)53.2 ('18°) 70 [전년비+31.6%] ('19°) 65 [전년비△7.1%]

- (품목) 축산물·공공요금 등은 상승하나, 석유류는 하락할 전망

- (농축수산물) 농산물의 오름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축산물 기저효과*, 사육조절 등으로 오름폭 소폭 확대

* '18년 축산물은 사육마릿수 증가 등으로 가격 약세 지속('18.1~11(전년비) △4.1%)

- (석유류)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18.11.6 ~'19.5.6, △15%) 등의 영향으로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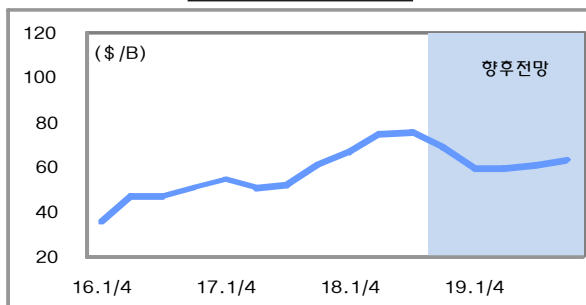
- (공공서비스) 교통, 도시가스 등의 요금 인상압력이 지속되고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름폭 확대

* '18.1~11 물가상승률(전년비, %): (전기수도가스)△2.5 (공공서비스)0.1

- (개인서비스) 무상급식 확대, 의료비 경감 등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부담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오름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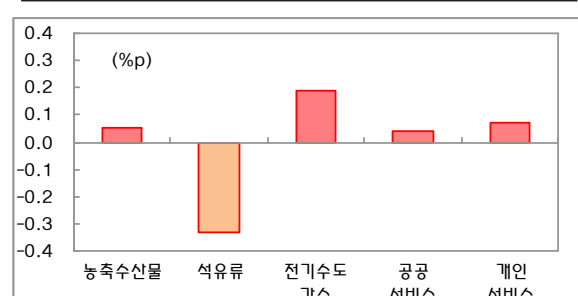
- ('19년 전망) '18년(1.6%)과 동일한 1.6% 예상(전년비)

유가 예상경로



* 출처 : EIA

'18년 대비 '19년 기여도 변화 전망



출처: 통계청

4. 수출입과 경상수지

◇ [수출(통관) 연간 3.1%, (수입(통관) 연간 4.2% 증가 예상

- (수출)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美-中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 등으로 통관수출은 '18년(6.1%)보다 둔화된 3.1% 증가 전망

* 세계 교역량 증가율(% , IMF): ('16) 2.2 ('17) 5.2 ('18) 4.2 ('1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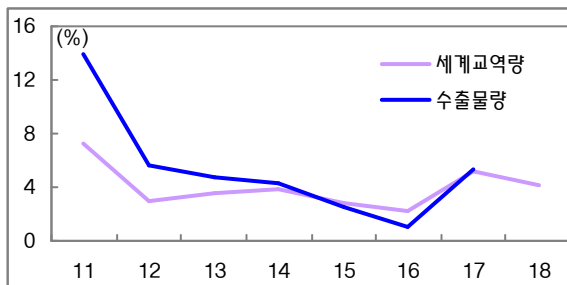
- (품목별)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석유제품·컴퓨터 등도 성장세 감소 예상

*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전망(% , WSTS): ('16) 1.1 ('17) 21.6 ('18) 15.9 ('19) 2.6

- 다만, 최근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던 선박*·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은 내년에는 '18년보다 개선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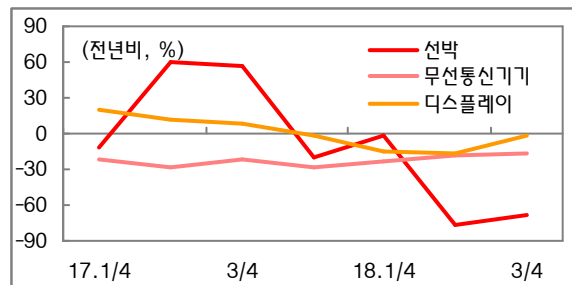
* 선박 수주량(만CGT): ('14)1,307 ('15)1,098 ('16)220 ('17)748 ('18.1~11)1,090

세계교역량과 수출물량 관계



* 출처 : IMF, 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증가율



* 출처 : 무역협회

- (지역별)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미국·중국·중동 등에 대한 수출 둔화 예상

* 성장률 전망('18→'19, IMF): (미국) 2.9 → 2.5 (중국) 6.6 → 6.2 (EU) 2.2 → 2.0

** 국제유가 전망(달러/배럴, 두바이유 기준): ('16) 43 ('17) 53 ('18) 70 ('19) 65

- (기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 금리인상 및 신흥국 금융불안 등은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중 무역전쟁 확대시 세계 GDP는 '21년까지 최대 0.8% 감소(OECD)

○ (수입)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수입 단가 둔화로 통관 수입은 '17년(12.5%)보다 둔화된 4.2% 증가 예상

- 수입 단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 부진이 다소 완화되며 수입 물량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수입 유발계수(한은): (민간 소비) 0.28 (민간 투자) 0.36 (수출) 0.42

◇ [경상수지] 640억불 내외 흑자 예상

○ (상품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수출 둔화 등에 따라 흑자폭은 '18년보다 축소 전망 ('18: 1,200 → '19: 1,075억불)

○ (상품外 수지) 서비스 수지 적자 감소로 적자폭 축소 전망

- 서비스 수지는 운송수지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여행·건설 수지 등이 개선되면서 적자폭이 다소 완화될 전망

* 운송수지 증감(억불): ('15) △15.6 ('16) △61.8 ('17) △37.5 ('18.1~10) △0.4

** 여행수지 증감(억불): ('15) △47.0 ('16) 1.4 ('17) △72.6 ('18.1~10) 3.3

-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는 국내기업의 배당성향 강화, ODA 확대* 등으로 적자기조가 유지될 전망

* ODA 예산규모(조원) ('14) 2.3 ('15) 2.4 ('16) 2.4 ('17) 2.6 ('18) 3.0

경상수지 전망

(단위: 억불)	2017년	2018년 ^e	2019년 ^e
▶ 경상수지 규모	784.6	740	640
▪ 상품수지	1,199	1,200	1,075
- (통관)수출 / (통관)수입	15.8 / 17.8%	6.1 / 12.5%	3.1 / 4.2%
▪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414	△460	△435

2018~2019년 경제전망 요약

(전년동기비, %)

	'17년	'18년 전망				'19년
		1/4	2/4	3/4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¹⁾	3.7	-	-	-	3.7	3.7
Dubai 유가(\$/bbl)	53	64	72	74	70	65
실질 GDP	3.1	2.8	2.8	2.0	2.6~2.7	2.6~2.7
민간소비	2.6	3.5	2.8	2.5	2.8	2.7
설비투자	14.6	7.3	△3.0	△7.4	△1.0	1.0
건설투자	7.6	1.8	△1.5	△8.9	△2.8	△2.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5	2.2	1.6	2.5	2.8
경상 GDP	5.4	3.5	3.5	2.1	3.3	3.9
취업자 증감(만명)	32	18	10	2	10	15
고용률(15~64세, %)	66.6	66.0	66.9	66.7	66.7	66.8
소비자물가	1.9	1.3	1.5	1.6	1.6	1.6
경상수지(억달러)	785	118	178	280	740	640
상품수지(억달러)	1,199	239	318	359	1,200	1,075
수출(통관)	15.8	9.8	3.1	1.7	6.1	3.1
수입(통관)	17.8	13.7	12.9	7.8	12.5	4.2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414	△121	△140	△79	△460	△435

1) IMF World Economic Outlook('18.10월)

별첨 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 86개 과제 -

1. '18.12월 주요 추진과제 (7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 산업구조 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투자(1.2조원) 	금융위, 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SOC 사업 예산 회계연도 개시 前 배정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혁신전략 마련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 마련 	중기부,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단축 제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고용부

2. '19.1/4분기 주요 추진과제 (35개)

(1) 1월 (12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 	산업부, 국토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사업 선정 	균형위, 기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선정·발표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자금 거치기간 연장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기재부,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정보 및 직무분석·평가 인프라 확충 	고용부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마련	고용부
▪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기재부, 금융위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대상 확대	고용부
▪ 자영업자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중기부
▪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설치지원 확대	고용부

(2) 2월 (8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관계부처 합동 IR 개최	기재부
▪ 벤처기업 재투자시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 P-CBO 공급 규모('18년 2.1조원 → '19년 2.7조원) 확대	금융위, 중기부
▪ 스마트 산업단지 시범산단 선정	산업부 등
▪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기재부
▪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고용부
▪ 월세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금융위

(3) 3월 (15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운용방안 마련	국토부
▪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국조실 등
▪ 혁신모험펀드 운영 개선	금융위, 중기부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 도입 추진	금융위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	기재부
▪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 C-ITS 실증사업 2개지역 추가 선정	국토부
▪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 수립	산업부
▪ 신약 해외 임상시험(3상) 세제지원 대상 포함	기재부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	기재부
▪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마련·추진	고용부
▪ 지역 노사상생형 일자리 지원방안 마련	기재부·고용부
▪ 소상공인 페이(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중기부
▪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연구용역 실시)	국토부
▪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허용방안 마련	산업부

3. 2/4분기 주요 추진과제 (20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민간투자사업 대상의 포괄주의 방식 전환 등 제도개편	기재부
▪ 예비타당성제도 발전방안 마련	기재부
▪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편)	금융위, 특허청
▪ 기술금융펀드 조성	금융위, 특허청 등
▪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행안부
▪ K-Ocean Route, 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수부
▪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 정산분(9조원) 지급	기재부
▪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설정	금융위

정책 과제	부처·기관
▪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 창출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 비금융사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결제 허용	기재부
▪ 유망 서비스업(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혁신 전략 수립	기재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 20년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 결정	최임위
▪ 풍수해 취약지역 대상 종합정비 계획 수립	행안부 등
▪ 경쟁형, High Risk-High Return형 R&D 지원 확대	과기부
▪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추진	과기부
▪ AI 허브 구축·운영	과기부
▪ 수소 시범도시 모델구상 및 조성방안 마련	국토부
▪ 기업주도 첨단·융복합 분야 직업훈련 도입방안 마련	고용부
▪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 신설	법무부
▪ 중장기 비전·전략 발표	기재부

4.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 (24개)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창업목적 자금 증여시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범위 확대 추진	기재부
▪ 일괄담보제도 도입방안 마련	금융위, 법무부, 특허청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재부
▪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 * 연천 한겨레 얼 체험공원, 김포 애기봉 생태평화공원	문체부
▪ 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 도입	법무부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금융위

정책 과제	부처·기관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공급	금융위
▪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 신규 출시	금융위
▪ 대여·반납구역 제한없는 카셰어링 도입 기반 마련	국토부
▪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산단계획 수립	산업부
▪ 기업활력법 개편	산업부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고용부
▪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중기부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재창업 지원 확대	금융위
▪ 취약계층의 소액·장기 체납액 분할납부 등 방안 마련	기재부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마련	기재부, 중기부
▪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기재부
▪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종합 개선대책 마련	공정위
▪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논의 참여	기재부
▪ 공익법인 외부감사 제도적 기반 구축	기재부
▪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조성	중기부
▪ 해외우수인력(내국인) 귀국시 소득세 면제	기재부

별첨 3

2019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KDI)

※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

◇ 국민들은 경제활력 제고, 경제·사회구조 혁신,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를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축으로 인식
⇒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통해 국민요구 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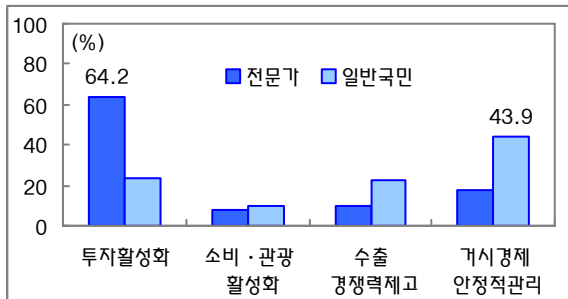
① ('19년 경제정책방향) 전문가는 '경제활력 제고', 일반국민은 '미래 대비'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우선 순위로 지목

(%)	경제활력제고	경제·사회구조 혁신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전문가	62.5	29.3	3.6	4.6
일반국민	26.8	28.4	16.2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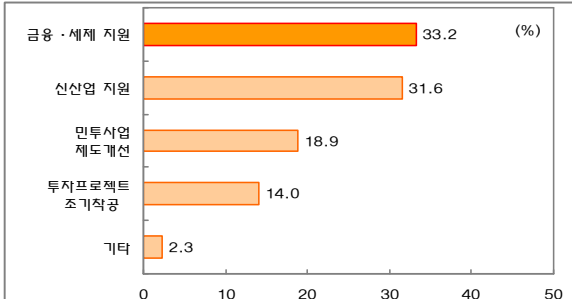
② (경제활력 제고) 경제활력 제고 우선 과제로 투자활성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등에 높은 응답

○ 투자활성화를 위한 역점과제로 금융·세제지원 강화, 유망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을 지목

경제활력 제고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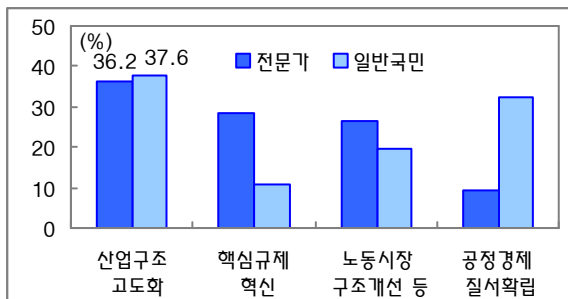
투자활성화를 위한 역점과제(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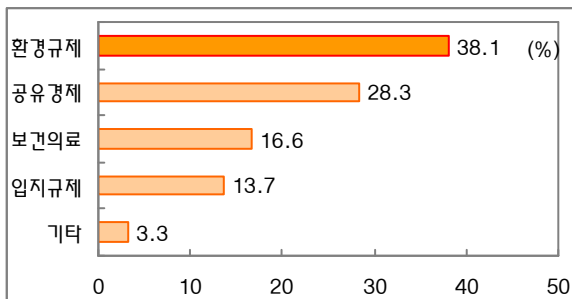
③ (경제·사회구조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핵심규제 혁신 등이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응답

○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환경규제, 공유경제 등을 지목

경제·사회구조 혁신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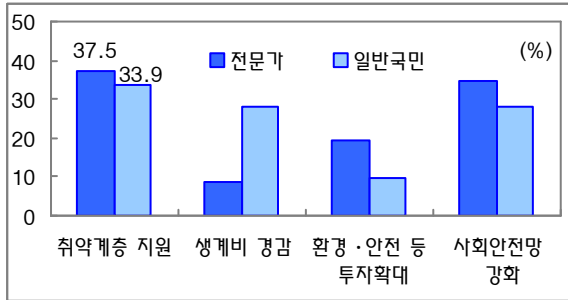
규제혁신 필요분야(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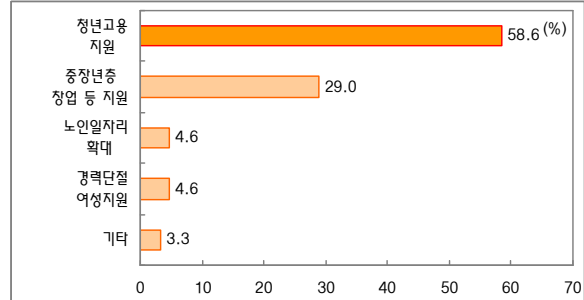
④ (포용성 강화) 전문가·일반국민 모두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소득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

-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청년고용 지원, 중장년층 창업·재취업 지원 등을 지목

포용성 강화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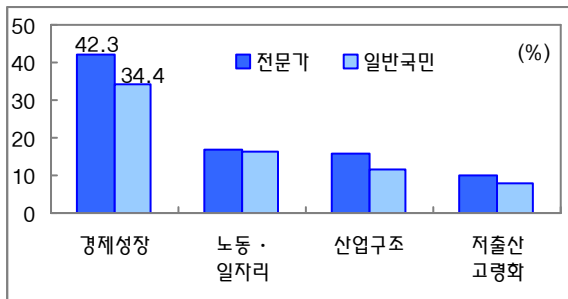
계층별 맞춤형 지원 역점과제(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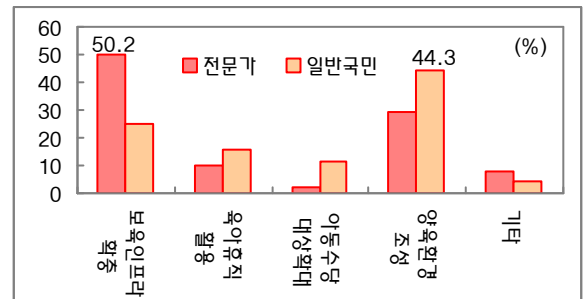
⑤ (미래 대비) 중장기 비전·전략 마련이 필요한 분야로는 경제성장, 노동·일자리, 산업구조, 저출산·고령화에 높은 응답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는 보육인프라 확충, 일반국민은 부모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응답

중장기 비전·전략마련 필요분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역점과제



[참고] '19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오픈형 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오픈 설문으로 받아 워드 클라우드 작성



- ◇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 “일자리”, “투자” 등을 많이 언급
- ⇒ 기업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이끌 수 있는 정책방향 주문